



주간통일정세 2010-21(2010.05.17~05.23)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주간 통일정세

2010-21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가. 정치

● 北, 돌연 최고인민회의 소집(5/17, 조선중앙통신)

- 통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함에 대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이 17일 발표되었다”며 “결정에 의하면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3차 회의를 6월 7일 평양에서 소집한다”고 전함.
- 앞서 북한은 지난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2차 회의를 개최, 예산과 헌법 일부 조항 개정, 조직문제를 다뤘다는 점에서 두 달 만에 돌연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하는 것임.

● 北김정일, 긴장국면 속 북부 산업시찰 행보(5/21, 조선중앙통신)

- 통신에 따르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량강도의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 건설장(16일 보도)을 시작으로 삼지연군·백암군(18일 "), 혜산시·대흥단군(19 ")을 시찰했으며 뒤이어 20일에는 함경북도 어랑군의 어랑천발전소 건설장과 청진시의 청진토끼종축장, 관모봉기계공장을 현지지도한 것으로 전해짐.
- 이어 통신은 21일 김 위원장이 함경남도 함흥시를 방문한 사실을 전함. 또한 통신은 이날 새벽 김 위원장이 함흥시에 위치한 룡성기계연합기업소를 현지지도하고 함흥시내를 돌아봤다고 보도한 데 이어 저녁에는 그가 함흥화학공업대학을 찾았다고 전함. 김 위원장은 함흥시 시찰에서 도시 건축계획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짐.
- 시찰에는 노동당의 김기남 비서, 김경희 경공업부장, 장성택 행정부장, 주규창·리제강 제1부부장, 태종수 함경남도 당 책임비서 외에 현철해·리명수 국방위원회 국장이 수행

■ 김정일 동향

- 5/16 김정일, 양강도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 건설장 현지지도(5/16, 중통)
 - 김히택(양강도총 책임비서), 김기남(黨비서), 김경희·장성택(黨부장), 주규창·리제강(제1부부장), 현철해·리명수(국방위 국장) 등 동행
- 5/18 김정일, 새로 건설하는 대규모 감자농장(양강도 백암군 덕포지구)과 삼지연군 여러 부문사업(김일성 동상과 삼지연 대기념비, 삼지연 장공장) 현지지도(5/18, 중통)



- 김희택(양강도위 책임비서), 김기남(黨비서), 김경희·장성택(黨부장), 주규창·리제강(제1부부장), 현철해·리명수(국방위 국장) 등 동행
- 5/19 김정일, 해산시 해산강철공장·신발공장·김정숙사범대학 등 현지도(5/19, 중통)
 - 김희택(양강도위 책임비서), 김기남(黨 비서), 김경희·장성택(부장들), 주규창·이제강(제1부부장들), 현철해·리명수(국방위 국장들) 동행
- 5/19 김정일, 대흥단군(백산돼지목장, 대흥단감자가공공장, 대흥단읍 및 새로 건설된 국수집) 현지도(5/19, 중통)
 - 김희택(양강도위 책임비서), 김기남(黨 비서), 김경희·장성택(부장들), 주규창·이제강(제1부부장들), 현철해·리명수(국방위 국장들) 동행

나. 경제

- **北-中 경협 본격화 되나… 北인사 잇단 방중(5/21, 연합뉴스)**
 - 21일 중국의 외교 소식통과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에 따르면 북한 라진항의 배호철 항장이 지난 19일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 훈춘(琿春)시를 방문, 강호권 훈춘시장과 면담한 것으로 알려짐.
 - 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라진항은 뛰어난 지리적 조건을 갖췄으며 바다 진출을 원하는 훈춘시의 전략 거점”이라며 “창리(創立) 등 중국기업들이 라진항을 통해 중국 남방은 물론 한국과 일본, 러시아 향로 개척을 추진 중인 만큼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요청
 - 이에 대해 배 항장은 “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해 고위급 지도자와 경제 협력을 논의, 양국 변경지역의 협력에 더없이 좋은 환경을 만들었다”고 평가한 뒤 “훈춘시의 라진항을 통한 바다 진출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밝힘. 이어 그는 “라진항 진출을 모색하는 중국 기업들과 논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임.
- **평양국제상품전람회, 역대 최대규모 개최(5/22, 단둥신문망(丹東新聞網))**
 - 신문은 제13회 평양 춘계 국제상품전람회가 중국 기업들이 대거 참가한 데 힘입어 역대 최대 규모로 열렸다고 보도
 - 이어 신문은 지난 17-20일 평양 3대혁명전시관에서 열린 이번 전람회에 중국과 러시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등 16개국 기업이 참가, 전자와 기계제조, 방직 의류, 농산품, 석유화학, 자동차 및 차량부품, 가전제품 등 모두 324개의 부스를 운영했다고 전함.
 - 중국 기업들은 전람회 324개 부스 가운데 57%인 186개 부스를 차지하였으며 특히 신의주 접경인 단둥의 기업들이 78개 부스를 운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가한 것으로 알려짐.
 - 단둥시 경제무역대표단은 또 전람회 기간 오수용 북한 내각 부총리



와 이명산 북한 무역성 부상, 이학권 북한상회 회장 등과 면담, 북한과 단둥시 간 경제무역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올가을 단둥에서 ‘대북한 수출입상품 박람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함.

■ 기타 (대내 경제)

- 제13차 평양 봄철국제상품전람회 진행(5/17~20, 3대혁명전시관) 관련 200여개표준전시장과 특수전시장, 야외전시장으로 전개되어 있으며 각국 대표들의 투자설명회 및 상담회를 통한 상품수출입계약 체결 등 선전(5/19, 중통)

다. 사회·문화

● 조총련 3총사, 20일 北대표팀 합류(5/19, 조선신보)

- 신보는 일본프로축구 J-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정대세(가와사키), 안영학(오미야), 량용기(센다이)가 20일 일본을 떠나 유럽 전지훈련 중인 북한 축구대표팀에 합류한다고 전함.
- 신문은 정대세가 18일 도쿄 조선중고급학교에서 열린 환송모임에서 “월드컵에 출전하는 것을 꿈꾸고 축구를 해왔다”며 “재일동포들이 어떤 꿈이라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 北, 각지 사찰서 부처님 오신날 법회(5/21, 조선중앙통신)

- 통신은 ‘부처님 오신날 봉축 북남불교도 동시법회’가 일제히 열렸다고 보도
- “동시법회들에는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회와 각 도·시·군 위원회 교직자, 해당 사찰의 주지들과 승려, 신도들이 참가했다”며 “법회들에서는 예식에 이어 연설들이 있었으며 공동발원문이 봉독됐다”고 전함.
- 법회에서 연설자들은 “남조선 현 보수집권 세력의 친미 친일 사대, 반공화국 전쟁책동으로 핵전쟁이 터질 수 있는 대결국면이 조성됐다”면서 남북 및 해외 불자들이 합심해 6.15남북공동선언과 10.4선언을 고수하고 실천할 것을 촉구했다고 통신은 밝혔다.

● 1분기 北주민 2만여 명 中방문(5/22, 미국의 소리(VOA))

- 방송은 중국의 관광정책을 담당하는 국가여유국이 최근 발표한 외국인 입국 통계를 인용,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북한 주민 2만 1천여 명이 중국을 공식 방문했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0명 줄어든 인원이라고 전함.
- 성별로는 남성이 1만 8천 700명으로 88%를 차지해 2천 500명인 여성의 7.5배에 달했으며, 연령별로는 45세에서 64세 사이가 1만 300명으로 가장 많았고 25~44세가 9천 100명, 15~24세가 1천 300명이었음.



- 방문 목적은 중국 내 근로 9천 200명, 사업 4천 100명, 관광 900명 순으로 밝혀짐.

● **여자아시안컵축구, 북한 미얀마에 2-0 승리(5/23, 조선중앙통신)**

- 통신은 북한 여자축구 대표팀이 22일 중국 청두에서 열린 2010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조별리그 2차전에서 미얀마를 2-0으로 이겼다고 전함.
- 8개 나라가 출전해 2개 조로 나뉘어 각 조 상위 두 팀이 4강 토너먼트로 우승팀을 가리는 이번 대회에서 3위 안에 들면 2011년 6월 독일에서 열리는 국제축구연맹(FIFA) 여자월드컵에 나갈 자격을 획득하게 됨.
- 이 경기에서 북한은 일본, 미얀마, 태국과 함께 A조에 속하며 24일 일본과 3차전을 가짐.

■ **기타 (대내 사회·문화)**

- 경희극 '산울림' 공연은 '오늘의 대고조 시대에 새로운 대비약의 메아리로, 더 높은 창조와 좌표를 세워주고 있다'고 공연성과 선전(5/17, 중통)

2. 대외정세

가. 일반

● **北최태복 '북중친선, 대 이어 발전시켜야'(5/19, 조선중앙방송)**

- 북한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 겸 노동당 비서는 18일 류홍차이(劉洪才) 북한 주재 중국 대사가 자국 대사관에서 마련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방중 성과 축하모임에서 "조(북)·중친선을 대를 이어 공고히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확고부동한 입장"이라고 밝힘.
- 그는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이 "조중친선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으며 조중친선 역사에 길이 전해질 것"이라고 평가
- 류 대사는 "중국 당과 정부, 인민은 김 위원장을 따듯이 환대했다"면서 "이것은 전통적인 중조 친선의 불패성을 뚜렷이 보여줬다"고 화답함. 이어 "중국은 중조 관계를 높은 단계로 이끌고 두 나라 인민들 사이에 복리를 안겨주며 지역 평화와 공동 번영을 이룩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임.



■ 기타 (대외 일반)

- 北 피바다가극단, 5/14 中國 내몽골자치구에서 ‘홍루몽’ 첫 공연 (5/17, 중통)
- 駐北 中대사 유홍재, 5/18 김정일 訪中 성과 관련 친선모임 진행 (5/19, 중방)
 - 김영춘(인민무력부장), 최태복(黨비서), 김영일·김양건(黨 부부장들), 전의정(국방위 외사국장), 김성남·이용철(黨 부부장들) 등 초대
- 재일동포 조국방문단(단장 : 김수환), 5/18 평양 도착(5/18, 중방)
- 김영남, 5/17 카메룬공화국 창건 38돌 즈음 同國 대통령에게 축전 (5/19, 중통)

3. 대남정세

[北, 천안함 관련 입장]

○ 北양형섭, 천안함 ‘北무관’ 주장(5/17, 조선방송, 평양방송)

- 방송은,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양형섭 부위원장은 17일 천안함 침몰사건과 북한이 무관하다고 주장하면서 “남조선 괴뢰패당의 대결과 전쟁책동을 결코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했다고 전함.
- 양 부위원장은 이날 평양 중앙노동자회관에서 열린 ‘광주인민봉기’(5.18 민주화운동) 30돌 기념 평양시 보고회 보고를 통해 남한 당국을 ‘남조선 괴뢰 보수패당’ 등으로 지칭하면서 “괴뢰군 함선 침몰사건을 우리(북)와 억지로 연결시키면서 정세를 대결의 최극단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
- 그는 또 금강산 관광 중단 책임을 남한 측에 돌리면서 “우리는 민족의 존엄이고 생명인 신성한 우리 체제를 감히 건드리는 자들에 대해서는 추호도 용납하지 않고 무자비하게 징벌할 것”이라고 말함.
- 이와 함께 “6.15 북남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태도는 북과 남의 화합과 대결, 통일과 분열, 애국과 매국을 가르는 시금석”이라면서 한국인들에게 “괴뢰 보수당국의 친미 파쇼독재 부활책동을 단호히 짓부셔 버리기 위한 투쟁에 과감히 떨쳐나서야 한다”고 강조
- 보고회에는 김영대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류미영 천도교 청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조충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의장, 안경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국장 등이 참석

○ 北반제민전, ‘천안함 사건은 북풍 자작극’(5/19,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남 통일전선기구인 ‘반제민족민주전선’(반제민전)을 내세워 ‘전 국민에게 격(檄)함’이란 글을 발표, 천안함 침몰사건을 “과거 군부파쇼독재자들이 상투적인 ‘위기탈출용’으로 써먹던 케케묵은 ‘북풍’자작극”이라고 주장했다고 중앙통신은 전함.
- 반제민전은 이 글에서 “이명박 패당은 반공화국 대결과 북침전쟁 도발책동의 희생물인 ‘천안호’ 침몰사건을 ‘북의 소행’으로 억지로 날조하여 민



심을 오도하고 ‘안보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위기에 처한 ‘선거’ 국면을 역전시켜 보려고 어리석게 획책하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

- 또한 “보수패당은 한반도의 평화와 국민의 안녕은 안중에도 없이 말끝마다 ‘주적론’과 ‘전쟁불사’ 폭언을 거리낌 없이 뇌까리고 있으며 그들에 의해 이 땅은 말 그대로 위태로운 전쟁발발 직전의 벼랑 끝에 놓여있다”면서 “이 땅의 평화와 통일을 절절히 바라는 국민이라면 어찌 온 강토가 불바다에 잠기고 생의 터전이 초토화되는 무서운 핵전쟁 발발의 위협을 보고만 있을 수 있겠는가”라고 주장

○ **北국방위 ‘南에 검열단 파견… 제재엔 전면전쟁’(5/20, 조선중앙방송)**

- 방송은 북한 최고지도기관인 국방위원회가 남한의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를 ‘날조극’이라고 주장하면서 국방위 검열단을 남한에 파견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함.
- 국방위는 이날 발표한 대변인 성명에서 “천안함의 침몰을 우리와 연계돼 있다고 선포한 만큼 그에 대한 물증을 확인하기 위해 국방위원회 검열단을 남조선 현지에 파견할 것”이며 “함선 침몰이 우리와 연계돼 있다는 물증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
- 성명은 “검열단 앞에 내놓은 물증에는 단 한 점의 사소한 의혹도 없어야 함을 미리 상기시킨다”고 강조하였으며 이어 “그 어떤 응징과 보복행위에 대해서도, 우리의 국가적 이익을 침해하는 그 무슨 제재에 대해서도 그 즉시 전면전쟁을 포함한 강경조치로 대답할 것”이며 “우리가 수행하는 전면전쟁은 날조극을 꾸민 역적패당과 그 추종자들의 본거지를 청산하고 통일대국을 세우는 전민족적이고 전인민적인 전국가적인 성전”이라고 주장
- 또한 “조선 서해를 포함해 우리 주권이 행사되는 영해, 영공, 영토 안에서 발생하는 자그마한 사건도 대결 광신자들의 도발로 낙인하고 한계가 없는 보복타격, 자비를 모르는 강력한 물리적 타격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임.

○ **北조평통, ‘전쟁국면 간주, 남북관계 대처’(5/21,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21일 천안함 침몰사건 조사결과 발표와 관련, “이 시각부터 현 사태를 전쟁국면으로 간주하고 북남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그에 맞게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통신은 전함.
- 조평통은 이날 ‘공화국 정부당국을 대변’해 발표한다는 대변인 성명에서 “괴뢰패당이 ‘대응’과 ‘보복’으로 나오는 경우 북남관계 전면폐쇄, 북남불가침 합의 전면파기, 북남협력사업 전면철폐 등 무자비한 징벌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힘.
- 조평통은 천안함 침몰사건 조사결과 발표에 대해 “우리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엄중한 도발로, 노골적인 선전포고로 낙인한다”며 북한 소행임이 명백하게 드러난 결정적 증거물에 대해서도 “어디서 주어온 것인지 알 수도 없는 파편과 (알루미늄) 조각 같은 것을 ‘증거물’로 내놓았다”며 ‘특대형 모략극’이라고 주장



- 또한 '우리의 존엄을 감히 모독하는 자들은 무자비하고도 단호한 징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는 이날 성명에서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 사건을 6.2지 방선거에 이용하려한다며 "남조선에 전시상태와 같은 분위기를 조성하고 우리 측 지역에 들어와 있던 남측 인원과 장비, 물자를 긴급 소개하며 신변안전대책과 철수준비를 갖추는 데 대한 극비지령을 내리는 소동을 피우고 있다"고 말함.

○ 北외무성, 천안함 美 지지입장 비난(5/21, 조선중앙통신)

- 북한 외무성은 21일 북한이 천안함 사건과 무관함을 거듭 주장하면서 한국정부의 조사결과 발표에 대한 미국의 지지 입장을 비난하고 나섬.
-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이 남조선 함선 침몰사건을 놓고 '북조선의 공격행위'니,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도전'이니 하며 우리를 걸고 들었다"며 "이것은 미국이 우리 공화국을 고립 압살시키려는 적대시 정책을 변함없이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고 통신은 전함.
- 이어 대변인은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우리는 괴뢰 함선 침몰사건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며 "국제법을 항상 준수해온 우리에게 있어서 미국의 주장은 적반하장"이라고 강변
- 담화는 이어 "이번 사건의 조작과 그 '조사결과'라는 것은 철두철미 미국의 승인과 비호, 조작에 의한 자작극"이며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고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수호하는 것은 우리의 일관한 정책이지만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침해하려는 행위는 추호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
- 담화는 또한 "조미(북미)는 원래 2009년 12월에 있는 평양 쌍무회담에 이어 뉴욕에서 또 한차례의 회담을 진행하기 위한 교섭 중에 있었다"며 "이것은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이 발기한 3단계 제안에 따라 궁극적으로 6자 틀거리를 되살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며 "그러나 대외정책에서 나약하다는 평판을 받고 올해 1월의 상원 보선에서 공화당에 패한 민주당의 오바마 행정부는 또 다시 강경으로 돌아서면서 괴뢰함선침몰사건 하나에 걸어 조선반도 비핵화 과정까지 전면적으로 차단시켰다"고 미 오바마 정부를 비난

○ 北인민무력부장 '南, 검열단 무조건 수용해야'(5/22, 조선중앙통신)

- 통신은 북한 김영춘 인민무력부장이 "(남측은) 국방위원회 검열단을 무조건 받아들여 세계 앞에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전함.
- 김 부장은 이날 남측에 보낸 통지문에서 "남측의 말대로 조사결과가 객관적이고 과학적이라면 우리 검열단을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남측은 국방위원회 검열단을 즉시 받아들여야 하고 그 앞에 단 한 점의 사소한 의혹도 없는 물증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
- 그는 남측의 군사정전위 조사 후 북-유엔사 간 장성급회담 개최 입장에 대해 "발생한 사건을 처음부터 우리와 연계시킨 것도 남측이고, 그 무슨 합동조사결과를 전후해 끝끝내 우리와 대결을 공언한 것도 남측"이라며 "이번 사건은 애초부터 남측에 의해 북남 사이의 문제로 날조된 만큼 군



사정전위원회라는 유명기구를 끌어들이 하등의 명분도 없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밝힘.

- 통신은 “지금까지 조선 서해해상문제를 북남 군부가 직접 다루어왔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라며 “한때 미 행정부도 조선서해문제는 자신들이 관할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공식 밝힌 바 있다”고 주장
- 김영춘 인민무력부장은 이어 “불가침에 관한 북남기본합의서의 제2장 10조와 부속합의서의 제2장 8조의 요구에 비춰보아도 남측은 우리 국방위원회 검열단을 받아들이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임.
- 기본합의서 제2장 10조는 “남과 북은 의견대립과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한다”고 되어 있으며, 부속합의서 제2장 8조는 “남과 북은 어느 일방이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이 합의서를 위반하는 경우, 공동조사를 하여야 하며 위반사건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한다”고 명시

● 北, 노무현 前대통령 1주기 보도 잇따라(5/23, 노동신문; 민주조선; 우리민족끼리)

- 북한 매체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1주년을 맞아 남한 정부를 비난하면서 6.2지방선거에서 투표로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
- 노동신문은 개인 필명 논평에서 “그의 죽음은 결코 자살이 아니라 남조선 보수패당의 정치 보복적인 것”이라며 “보수패당은 민족 화해를 주장하는 진보세력 숙청의 칼을 뽑아들었고 주 대상은 10.4선언 체결 당사자인 노무현이었다”고 덧붙임.
- 민주조선도 개인 필명 논평에서 “노무현에게 심리적 압박감과 수치감을 안겨줘 자살의 길로 내몰았다”며 “남조선(남한) 인민들은 지방선거에서 보수패당에 준엄한 심판을 내릴 것”이라고 선동
- 우리민족끼리도 논평에서 “노무현 사망 1주기를 맞는 지금 남조선에서는 그에 대한 추모 분위기와 함께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간 자들에 대한 울분과 단호한 심판 의지가 강하게 분출되고 있다”고 주장

■ 기타 (대남)

- 북남장령급 군사회담 북측단장, 5/16 대북심리모략행위 중단 요구 및 남측인원들의 동, 서해지구 북남관리구역 “육로통행 제한, 차단 이상의 실제적 조치” 위협 통지문 발송(5/16, 중통)
- 금강산지구 남측 부동산 몰수 및 동결조치 등은 “공화국의 합법적 제재권의 발동”이라며 “금강산 관광길을 가로막은 보수패당에게 제재가 가해지는 것은 응당”하다고 주장(5/17, 평방)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美·日, 北 강력규탄.. 中 “조사결과 주목”(5/20)

- 전 세계 주요국들은 20일 한국 정부의 천안함 침몰사건 조사결과 발표와 관련,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규탄 입장을 밝혔음.
- 미국 정부는 이날 발표 직후 백악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조사결과에 대한 지지를 확인하면서 이번 사태의 책임이 북한에 있음을 명확히 했으며,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일본 총리는 긴급 관계 각료 회의를 소집하고 북한을 강하게 비난했음. 그러나 중국 정부는 천안함 사태에 대해 “불행한 사건”이라면서도 북한의 어뢰공격에 의한 침몰이라는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온도차’를 감지케 했음.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조사결과 발표 직후 대변인실을 통해 공식성명을 내고 “그간 한국 정부가 절제와 인내심을 갖고 침몰원인의 규명을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을 통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를 진행해 온 것을 평가한다”면서 “(조사 결과를) 심각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했음. 그는 특히 “보고서에 적시된 사실 관계는 매우 엄중하다”며 “이 문제에 대해 계속 깊은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음.
- 백악관은 로버트 기브스 대변인의 성명을 통해 “국제조사단에 의해 오늘 발표된 보고서는 증거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토를 반영한다”면서 “이(조사결과)는 북한이 이번 공격에 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너무나 강력히(overwhelmingly) 알려준다”고 밝혔음.
- 그러면서 “미국은 그들의 목숨을 앗아간 침략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condemn)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공격은 북한의 용납할 수 없는 행위와 국제법 위반의 또 하나의 예”라면서 “이번 공격은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도전이자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비난했음.
- 일본 정부는 정부 대변인인 히라노 히로후미(平野博文) 관방장관이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 입장을 밝힌 데 이어 하토야마 총리가 긴급 관계 각료회의까지 소집하는 등 신속한 대응을 보였음. 하토야마 총리는 각의에서 “천안함 침몰 원인의 조사 결과에 대해 한국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들었다”면서 “일본은 한국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말했음.
- 그는 이어 “북한의 행동은 용인이 어려우며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히



비난한다”면서 “향후 대응에서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한국, 미국을 비롯한 관계국과 긴밀한 공조와 협력을 해 나가겠다”고 역설했음.

- 영국의 윌리엄 헤이그 외무장관도 성명을 내고 “이번 공격은 북한이 인간생명을 무참히 경시하고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의무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비난한 뒤 “북한의 행동은 국제사회의 불신을 더욱 깊게 했다”고 지적했음.
- 헤이그 장관은 그러면서 “다국적 조사단에 포함된 영국 전문가들은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다”며 “그들은 이번 조사의 객관성에 깊은 인상을 받은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다. 역시 다국적 조사단에 자국 전문가를 파견한 호주의 케빈 러드 총리도 천안함 사태를 ‘적대적이고 정당성이 없는 행위’로 규정한 뒤 “국제사회는 이 같은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 그러나 이에 비해 중국 정부는 비교적 유보적인 공식 입장을 내놓으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음. 마자오쉬(馬朝旭)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조사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면서 “각 국은 냉정하고 절제된 태도로 유관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해 한반도 정세의 긴장을 막아야 한다”고 답변했음.
- 마 대변인은 또 “천안함 사건은 불행한 사건으로 중국 정부는 수차례 한국 정부에 천안함 희생자에 대한 애도와 위로를 표명해왔다”면서 “중국은 일관되게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6자회담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천안함 문제가 논의될 경우 상임이사국 가운데 중국과 함께 ‘변수’가 될 수 있는 러시아 정부는 이날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아직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음.

● “천안함 사건, 동북아안보에 중대 영향” <WSJ>(5/19)

- 한국 정부가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북한의 핵 포기를 위한 6자회담이 타격을 받는 등 동북아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9일 보도했음. 이 신문은 미국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조사결과 천안함 침몰은 북한의 소행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이 20일 이를 공식 발표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전했다.
- 이 신문은 또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의 아시아 순방 계획과 최근 북한 어선 및 경비정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 사실 등을 전하면서 한국 정부가 이미 남아있는 대북 경협조치의 중단을 논의하는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대북 추가 제재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음.
- 특히 미국 관리들이 천안함 문제로 인해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게 만들기 위한 6자회담 절차가 희생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음. 북한은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핵포기를 위한 6자회담의 협상 절차에는 복귀하지 않아 회담이 교착상태를 지속해왔음.

- 하지만 이 신문은 미국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으면서도 북한에 강력한 반응을 보이는 방안을 원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하지만 군사적 대응 외에 북한을 제재할 수단이 별로 없는 점이 딜레마라고 덧붙였다.

● “6자회담 재개시 北인권문제 의제화해야”(5/18)

- 데이비드 호크 전 국제 앰네스티 미국 지부장은 17일 북핵 6자회담이 재개된다면 북한의 인권문제도 의제로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호크 전 지부장은 이날 존스홉킨스대 국제대학원(SAIA)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공개한 자신의 논문 ‘인권을 향상시키며 평화 추구하기, 미국의 대북접근법’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 호크 전 지부장은 “향후 미국의 대북 접근방식에는 인권적 요소를 결합함으로써, 과거와는 차별화되는 ‘대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면서 “6자회담이 부활한다면 인권적 우려사항 및 인권 관련 이슈들이 ‘경제·에너지 지원 워킹그룹’을 비롯한 6자회담의 거의 모든 워킹그룹 내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 그는 또 ‘동북아 평화안보 협의체’ 창설 및 현행 정전협정을 대체할 평화협정 협상 과정에서도 북한의 인권문제가 다뤄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지 부시 전임 행정부가 실패한 점은 두 번의 임기 가운데 6년 동안 북한의 인권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실보다는 북한과 이 문제를 놓고 직접적인 대화를 하지 않은 데 있다”며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이를 ‘반면교사’로 삼을 것을 주문했다.
- 앞서 로버트 킹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인사말에서 “북한 인권문제는 오바마 행정부의 최우선 관심사”라며 “북한이 자국의 인권문제를 어떻게 다뤄 나가느냐가 향후 북·미관계의 미래를 규정하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 미·북 관계

● 브라운백 “北고립 위한 새 제재 필요”(5/23)

- 샘 브라운백(공화·캔자스) 미국 상원의원은 22일(미국 시간) 북한에 의해 자행된 천안함 사태와 관련, “미국은 종전의 대북제재를 부활하는 것은 물론 북한을 고립시키고, 동맹인 한국을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제재수단을 최대한 동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 브라운백 의원은 한국 정부의 천안함 사건 조사결과 발표 이후 오바마 행정부의 관리들과 만나 “북한에 대해 강력하고도 확실한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브라운백 의원은 “천안함을 겨냥한 북한의 기습공격은 믿을 만하고 안정적인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면서 “북한이 점점 더 뻔뻔한 행동을 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정권의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고 지적했음.

- 또 브라운백 의원은 “따라서 한국, 중국, 미국은 북한에서 더욱 불안정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며, 특히 북한 정권 붕괴 시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음. 브라운백 의원은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일관되게 주장하는 등 미 의회 내의 대표적인 대북 강경론자로 꼽힘.

● ‘BDA식 금융제재’ 다시 추진되나(5/23)

- 한·미 양국은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북한이 스스로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도록 충분히 ‘아픈’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임.
- 북한은 이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에 이어 1874호에 따라 ▲무기금수 및 수출통제 ▲화물검색 ▲금융·경제제재 등 포괄적인 제재를 받고 있음. 전문가들은 특히 지난 2005년 미국이 취했던 방코델타아시아(BDA) 방식의 금융제재가 북한이 충분히 ‘아파할’ 만한 조치로 거론하고 있음.
- ‘BDA식 금융제재’는 미국 재무부가 2005년 9월 15일 미국 재무부가 애국법 311조에 따라 마카오 소재 BDA를 ‘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하면서 결과적으로 BDA에 예치된 북한 예금 2천500만 달러를 동결한 조치를 일컬음. 미국 재무부는 단순히 BDA를 ‘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했을 뿐이지만 충격파는 엄청났음.
- 미국 금융기관들은 BDA와 거래를 중단했고, 아울러 미 금융기관과 거래에 불필요한 장애를 우려한 전 세계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BDA와 거래를 기피하자 마카오 당국이 나서서 북한 자금을 동결시키는 조치를 취했음. 나아가 전 세계 금융기관은 미국 재무부로부터 ‘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고자 스스로 북한 기업과 금융거래를 차단하고 나섰음. 미 재무부의 ‘돈세탁 우려 대상 지정’이라는 조치 하나로 국제 금융시스템과 시장경제원리를 활용해 북한의 자금 유통 경로를 완벽하게 차단한 셈임.
- 이 같은 조치에 북한은 9.19공동성명 채택 이후 탄력 받던 6자회담을 BDA 제재와 연계하며 강력하게 반발했고 결국 2006년 10월 9일 1차 핵실험을 감행하는 ‘벼랑끝 전술’로 맞섰음. 북·미는 우여곡절 끝에 2007년 1월 BDA 제재 해제에 합의, 6자회담에서 2.13 합의를 도출했으나 같은 해 6월 BDA에 동결됐던 북한 자금이 조선무역은행으로 입금되고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실무단 방북을 받아들이고서야 BDA 문제는 완전히 해결됐음. 이처럼 그 효과가 입증된 BDA 방식의 금융제재가 천안함 사태이후 다시 거론되는 것임. 그러나 미국이 이 조치는 추후 이를 해제할 때도 국내적으로 애국법 위반 논란이 야기될 정도로 과정이 복잡하다는 점에서 BDA 방식의



제재방안이 다시 추진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옴.

- 미국이 현재 행정명령 13382호에 따라 시행 중인 북한의 원자력중국과 조선단군무역회사 등 23개 북한 기관 및 기업과 김동명 단천상업은행장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고 자산동결 및 거래금지 등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제기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됨. 외교 소식통은 23일 “대북 금융제재에서 중요한 것은 애국법이나 행정명령과 같은 제재 근거가 아니라 효과적인 제재 대상의 선정”이라며 “미국도 자국법이나 국제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효과적인 제재 대상을 찾기 위해 고심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美정보당국, 천안함 ‘김정일 명령’ 결론”<NYT>(5/23)

- 천안함을 침몰시킨 북한군의 어뢰 공격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명령에 따른 것이라는 미국 정보당국의 분석이 나왔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2일 보도했음.
- 복수의 당국자들은 이 같은 분석이 확증보다는 정치역학에 근거한 판단을 기초로 한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병을 앓고 있는 김 위원장이 막내아들인 김정은에 대한 권력승계를 확실히 하기 위해 이번 천안함 공격을 명령한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 한 고위급 정보당국자는 미국 내 16개 정보기관이 취합한 정보를 근거로 “확실한 사실이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북한 지도부와 군부의 최근 상황을 감안하면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이런 분석이 이 시점에 제기된 것은 북한에 대한 제재 등을 추진하고 있는 미국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NYT는 지적했음.
- 실제 천안함 침몰 이후 신중한 입장을 밝혀온 이명박 대통령도 24일 유엔 안보리에 북한을 규탄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남북 간 교역을 중단할 것으로 예상되나 북한의 핵실험 이후 제재 국면에서도 미온적인 태도를 취해온 중국 측이 지원하지 않는 한 큰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이 신문은 전망했음. 아울러 미국과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천안함 침몰과 김 위원장을 직접 연계시키는 것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며, 이는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자칫 북한의 술수에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임.
- 이 신문은 이어 미국 정보기관들은 김 위원장이 최근 건강악화로 인해 훼손된 자신의 장악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김정은을 자신의 후계자로 지목하는 권한을 확인하기 위해 이번 공격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음. 특히 이들은 김 위원장이 지난달 25일 건군절을 맞아 제586부대를 방문하고 북한군 총참모부 김명국 작전국장을 대장으로 복귀시킨 것 등도 이번 공격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음.
- 지난해 11월 대청해전 패배로 인해 문책성 강등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던 김명국 국장이 대장으로 복귀한 것은 이번 천안함 공격이 당시의 보복을 위해 계획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는 것임.



조너선 폴락 해군대학 교수는 “김 위원장의 제586부대 방문은 천안함 공격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데 대한 치하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 이와 함께 NYT는 이번 천안함 사태가 가뜰이나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이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바쁜 버락 오바마 정부에 또 다른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음. 미 정부 관계자들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보복은 서울을 겨냥한 로켓 공격과 금융시장 패닉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면서도 만약 대가를 치르지 않고 넘어갈 경우 북한군을 대담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 “오바마 행정부, 北 테러지원국 재지정해야” <WP> (5/22)

-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북한의 천안함 공격행위 대응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해야 한다고 미국의 워싱턴포스트가 21일 사설을 통해 주장했다.
- 이 사설은 천안함 침몰 사건이 북한의 소행임을 보여주는 증거가 드러남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새로운 대북 제재를 요구하겠지만 중국이 이에 불응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오바마 행정부로서는 대(對)이란 제재를 위해 중국의 협조를 모색하는 상황에서 유엔의 대북 제재 문제로 중국을 압박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고 분석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해 응분의 결과가 따르도록 주장해야 할 상황이며 중국에 대해서도 이런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사설은 강조했다.
- 사설은 또 중국을 방문하는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중국과의 접촉에서 북한 문제를 최우선 의제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음. 사설은 만일 북한에 대한 유엔의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오바마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취할 수 있는 한 가지 수단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다시 올려놓는 것이라면서 최근 개리 애커먼(민주·뉴욕) 하원의원이 클린턴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도록 촉구한 사실을 상기시켰음.
- 사설은 특히 천안함에 대한 은밀한 공격뿐만 아니라 하마스와 헤즈볼라에 대한 북한의 무기 판매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것을 정당화시켜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천안함에 대한 어뢰 공격이나 핵실험을 통한 도발행위에 대해서는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로부터 보상이 아니라 응징이 따른다는 메시지를 얻어야만 한다고 사설은 지적했다.

● 北외무성, 천안함 美 지지입장 비난(5/21)

- 북한 외무성은 21일 북한이 천안함 사건과 무관함을 거듭 주장하면서 한국정부의 조사결과 발표에 대한 미국의 지지 입장을 비난하고 나섰다.



-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이 남조선 함선 침몰사건을 놓고 ‘북조선의 공격행위’니,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도전’이니 하며 우리를 걸고 들었다”며 “이것은 미국이 우리 공화국을 고립 압살시키려는 적대시 정책을 변함없이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 미국 백악관은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 직후 로버트 기브스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한국 정부의 천안함 침몰사건 조사결과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 입장을 밝히면서 이번 사건의 책임이 북한에 있다고 강력히 규탄했음. 대변인은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우리는 괴뢰 함선 침몰사건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며 “국제법을 항상 준수해 온 우리에게 있어서 미국의 주장은 적반하장”이라고 강변했음.
- 북한 외무성의 이런 입장 발표는 천안함 사건 조사결과 발표 당일인 20일 북한이 최고권력기관인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을 통해 조사결과 발표를 ‘남조선’이라고 주장하고 국방위원회 검열단 파견을 통보한 데 이어 오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남북관계 입장을 천명한 데 이은 대외관계 입장 표명임.
- 담화는 이어 “이번 사건의 조작과 그 ‘조사결과’라는 것은 철두철미 미국의 승인과 비호, 조장에 의한 자작극”이라고 발뺌하고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고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수호하는 것은 우리의 일관한 정책이지만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침해하려는 행위는 추호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했음.
- 담화는 또 “조미(북미)는 원래 2009년 12월에 있는 평양 쌍무회담에 이어 뉴욕에서 또 한차례의 회담을 진행하기 위한 교섭 중에 있었다”며 “이것은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이 발기한 3단계 제안에 따라 궁극적으로 6자 틀거리를 되살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며 “그러나 대외정책에서 나약하다는 평판을 받고 올해 1월의 상원 보선에서 공화당에 패한 민주당의 오바마 행정부는 또다시 강경으로 돌아서면서 괴뢰함선침몰사건 하나에 걸어 조선반도 비핵화 과정까지 전면적으로 차단시켰다”고 오바마 행정부를 비난했음.

● 美 “北 도발 용인 안 돼.. 결과 있을 것”(5/21)

- 미국은 20일 천안함 사건을 일으킨 북한에 대해 도발에 따른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관련국 간의 협의를 통한 공동 대응은 물론 미국 자체의 대북조치도 취할 방침임을 밝혔음.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천안함 사건을 “한국에 대한 북한의 침략행위”라고 거듭 규정한 뒤 “이번 사건은 북한에 의한 심각한 도발로, 분명히 결과들이 있을 것”이라면서 “도발 행위들은 용인되지 않을 것이며, 그에 대한 결과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음.
- 크롤리 차관보는 “우리가 집단적으로 취할 수 있는 일련의 조치들이 있으며, 우리 자신의 권한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이 있다”면서 “우리는 금융 분야 및 다른 분야에서 독단적으로 (대북) 조치들을 취할



권한을 갖고 있으며, 북한에 명백한 신호를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그는 또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의 한·중·일 순방시 북한 문제가 중요한 의제로 다뤄질 것이라면서 “적절한 다음 조치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6자회담) 5개 당사국들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향후 수주, 수개월 내에 가장 효과적인 대북조치에 대한 관련국간 협의가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 크롤리 차관보는 이어 북한에 대한 미국 정부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여부와 관련, “이용가능한 방안”이라면서도 “이 행위(천안함 사건)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정의적 문제가 있으며, 사실들에 근거해 이를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그는 거듭된 질문에 “분명히 이들 문제(테러지원국 재지정 문제들)를 검토할 것”이라면서 “(다만) 우리의 법 내에서 절차를 따를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 그는 미국의 향후 대응조치와 관련, “한국이 원하는 행동들에 의해 좌우될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입장을 정하면 미국은 지지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 이번 천안함 조사 결과에 대해 “매우 철저하고 집중적이며 과학적인 조사”라고 평가했다.
- 이와 함께 천안함 조사 발표 이후 전면전을 경고한 북한의 주장과 관련, “우리는 한국의 안보에 대한 확고한 공약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한반도 보호를 위해 한국에는 우리 군이 있으며, 한국을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방위공약을 확인했다.
- 그는 북한이 전례 없이 ‘검열단 파견’을 제의해 온 데 대해 “북한이 잃어버린 어뢰가 있는지를 조사해 보고 싶다면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일축했다. 이 밖에 크롤리 차관보는 6자회담 문제와 관련된 질문에 천안함 조사결과를 검토하고 다자적, 양자적 차원에서 가용한 조치들을 검토할 것이라면서 즉답을 피했다.

● 美하원 “北 규탄.. 사과 요구” 결의안 발의(5/21)

- 한국 정부의 천안함 침몰 조사결과를 지지하며 북한을 규탄하고 국제사회의 대응을 촉구하는 미 의회의 초당적인 결의안이 20일 하원에 발의됐다. 에니 팔레오마베가 미 하원 외교위원회 아태소위원장 주도로 이날 발의된 결의안은 “한국 정부의 조사 결과 보고서를 전적으로 지지한다”면서 “천안함을 침몰시킨 북한을 가장 강한 어조로 규탄한다”고 북한을 비난했다. 결의안은 이어 “북한에 대해 이번 적대적인 행위를 사과하고, 한국전 정전협정을 절대 위반하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 또 “한국 정부가 천안함을 침몰시킨 북한에 대응하는데 있어 국제사회는 한국 정부에 모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한반도 안보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국제사회가 전면적이고 충실하게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 결의안은 “미국이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과 협조해 천안함 침몰 사건 및 북한의 다른 적대적 행위들에 대응하기 위해 적절한 다른 조치들을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미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도 요구했음. 이 결의안에는 하워드 버먼(민주) 하원 외교위원장, 일레나 로스-레티넨 외교위 공화당 간사, 게리 아커만(민주) 외교위 부위원장, 도널드 만줄로 외교위 아태소위 공화당 간사 등 하원 외교위 민주·공화 양당 지도부가 공동발의자로 참여했음. 이 결의안은 25~26일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짐.
- 워싱턴 외교소식통은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 직후 한국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고 북한을 강력히 규탄하는 결의안이 나왔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외교위 양당 지도부가 결의안 발의에 모두 참여한 만큼 이견 없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음. 이에 앞서 상원은 지난 13일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결의안을 채택했으나, 당시는 조사결과 발표 이전이어서 결의안에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 등은 담기지 않았음.

● <긴급진단:천안함> 美 전문가 반응(5/20)

-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19일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드러난 북한의 도발적 행위 때문에 당분간 6자회담 재개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진단하고,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시도를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음. 또한 이들 전문가는 한국, 미국, 일본의 공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면서, 특히 북한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국의 긍정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브루스 클링너 미국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 = 클링너 연구원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비극과 위기의 시기에 동맹인 한국을 전적으로 지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음. 그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미 양국 사이에는 북한의 야만적인 침략과 관련해 어떠한 이견도 없어야 하며, 미국은 한국이 추진 중인 중인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결의를 전폭 지지해야 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음.

- 클링너 연구원은 “지난달 방한기간 한국의 당국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천안함 사건의 결과로 6자회담의 재개가 앞으로 6~12개월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를 들었다”며 “희생장병들의 피를 손에 적신 채로 북한과 협상하는 것은 부적절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 그는 또 “천안함 사건은 단발성 사건이 아니라 한반도에서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북한 행동의 서막일 수 있다”며 “특히 11월 한국의 G20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북한이 추가 도발을 도모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음. 특히 그는 “북한은 추가적인 도발을 정당화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이번 천안함 사건에 강력 대응하기를 오히려 바랄 수도 있다”고 밝혀 이번 사건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이 정교하게 이뤄져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 클링너 연구원은 향후 중국의 역할문제와 관련, “중국은 종전의 방식대로 이번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도 신중함과 자제를 요청하는 태도를 보일 것”이라며 “하지만 한국과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합당한 처벌이 북한에 가해지도록 중국 정부에 압력을 가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 피터 벡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센터 연구원 = 벡 연구원은 인터뷰에서 “이번 조사가 충분한 신빙성을 갖추고 있다면 한국과 미국은 이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며 “일본은 물론 이를 지지할 것이고, 중국과 러시아도 다른 선택지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음.

- 벡 연구원은 “다만 문제는 중국이 결의안 채택에만 동의할 게 아니라 채택된 결의를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면서 “앞으로 이 문제의 전개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북한을 6자회담의 틀로 복귀시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6자회담은 위기관리의 틀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중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 채택이 이뤄지면, 북한을 6자회담으로 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음. 다만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채택되면 북한은 이를 비난하며 또 다시 도발적인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 뒤 “그러나 이런 때에도 군사적 옵션은 검토대상에서 제외돼야 하며,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음.

◇ 니컬러스 에버스타트 미기업연구소(AEI) 연구원 = 에버스타트 연구원은 “이번 천안함 참극의 ‘살인 무기’에 북한의 지문이 남아있는 것은 놀랄 일이 전혀 아니다”면서 “국제사회는 지금까지 한국 정부당국의 최종 결론을 기다려왔을 뿐”이라고 밝혀 북한이 이번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것은 예상한 결과였다는 입장을 보였음.

- 에버스타트 연구원은 “북한은 그동안 핵무기 관련 위반사항, 미사일 위협, 한국 해군에 대한 기습공격 등에도 불구하고 ‘무벌칙’(zero penalty) 환경에서 지내왔다”면서 “만일 북한에 대해 아무런 처벌과 전제조건도 내걸지 않은 채 6자회담을 재개를 추구한다면, 이는 북한이 더 호전적인 행동을 하도록 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에버스타트 연구원은 “마약거래, 위폐제조, 불법 핵확산, 납치는 물론 천안함 해군들에 대한 ‘살인’에 이르기까지 반칙을 해 온 북한의 행동을 벌할 시점이 숙성하다 못해 늦은 감마저 있다”면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북한 경제를 감안할 때 국제사회의 경제적 벌칙은 북한 사회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음.



◇ 데니 로이 하와이대 동서문화연구소(동서센터) 선임연구원 = 로이 연구원은 “북한이 최근까지도 호전적 신호와 협조적 신호를 섞어서 발신하는 바람에 애매모호한 점이 많았는데 천안함 사건을 통해 ‘불량국가’의 범주에 자신들을 확실하게 자리매김하는 동시에 역내 안정을 위협하는 일이 국가전략의 일환임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지적했음.

- 그는 “이번 사건은 또한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에 보상을 해주던 과거의 방식과 단절해야 한다는 정책이 옳았음을 재삼 확인해주고 있다”고 말했음. 로이 연구원은 “만일 중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 채택에 맞서 북한의 방패가 돼주기를 자처한다면, 이는 국제사회가 중국에 기대하는 모습과는 정반대의 길을 걷는 무책임한 행동이 될 것”이라며 중국의 역할론을 강조했음.

● 백악관 “천안함 침몰 北책임, 강력 규탄”(5/20)

- 미국 백악관은 19일(현지시간) 한국 정부의 천안함 침몰사건 조사결과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 입장을 밝히면서 이번 사건의 책임이 북한에 있다고 강력히 규탄했음.

- 백악관은 이날 로버트 기브스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어뢰에 의해 3월 26일 침몰된 한국의 천안함 승조원 46명의 희생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과 한국 국민에게 깊은 위로의 뜻을 전달했다”면서 “미국은 그들의 목숨을 앗아간 침략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condemn)한다”고 밝혔음.

- 백악관은 “국제조사단에 의해 오늘 발표된 보고서는 증거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토를 반영한다”면서 “이(조사결과)는 북한이 이번 공격에 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너무도 강력히(overwhelmingly) 알려준다”고 강조했다. 백악관은 이어 “이번 공격은 북한의 용납할 수 없는 행위와 국제법 위반의 또 하나의 예”라면서 “이번 공격은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도전이자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비난했음.

-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17일 이 대통령과 대화를 나눴으며, 이번 공격으로 숨진 46명의 장병들을 위해 정의를 확보하고 추가적인 침략 행위들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한국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전했다.

- 백악관은 “북한은 이웃들에 대한 호전성과 국제사회에 대한 도발이 힘이 아닌 약함의 신호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면서 “그런 용납할 수 없는 행위는 북한의 고립만 심화시킬 것이며, 모든 도발들에 맞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보호하기 위한 이웃 국가들의 협력 의지를 강화시킬 것”이라고 밝혔음. 이날 성명은 우리 정부의 조사결과 발표 직후인 현지시간 19일 밤 늦게 발표됐음.



● 美国무부 “北 테러지원국 재지정 움직임 몰라”(5/20)

- 미국 국무부의 고든 두구드 부대변인은 19일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아는 바 없다고 밝혔음. 두구드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라는 하원 의원 서한이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에게 발송된 것과 관련, “테러 지원국 지정은 어느 정도의 법적 요구들이 있는 것”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음.
- 그는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한 것은 2년 전 이뤄진 결정”이라면서 “이 시점에서 그들을 다시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려놓으려는 어떤 움직임도 본 것은 없다”고 밝혔음. 이 같은 언급은 천안함 사건 등에도 불구하고 아직 현시점에서는 테러지원국 지정 문제가 미 행정부 내에서 실질적으로 논의되지는 않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임.
- 하지만 그는 “(조사결과) 문건이 공개가 되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할지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면서 “다가올 (클린턴 장관의) 방문들에서 일부 자세한 것들이 논의될 것”이라고 언급, 테러지원국 재지정의 개연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음.
- 그는 천안함 사건 발표 이후 한미 간 대응책과 관련, “사람들이 논의하고 있는 여러 옵션이 있다”면서 “우리는 (조사결과) 보고서의 결론을 물론 지지할 것이며, 한국의 안보를 위해 지원하고 헌신할 것”이라고 말했음.
- 한편 미 의회 차원에서는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일레나 로스-레티넨 의원이 황장엽 노동당 비서에 대한 암살시도 및 헤즈볼라에 대한 무기수출 시도 등을 이유로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촉구하는 법안을 이르면 20일 의회에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음.

다. 중·북 관계

● <긴급진단:천안함> 英언론, 대북제재 中역할 촉구(5/22)

- 천안함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 발표이후 북한에 대한 제재와 재발방지 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22일 ‘한국이 도발행위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라는 제목의 분석기사에서 “중국은 유엔안보리의 조치에 유일하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북한에 대한 결정적인 연료 공급 경로 등을 컨트롤하고 있다”면서 안보리 대응의 핵심은 중국이라고 지적했음.
- 더타임스는 그러나 “중국은 말썽 많은 이웃 국가의 무릎을 꿇릴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지만 그렇게 하려하지 않는다”면서 “중국으로서는 몇 십 명의 한국 군인들이 희생된 데 대해 대응하는 것 보다 김정일 정권이 붕괴되지 않고 현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신문은 ‘불량 국가’(Rogue State)라는 제목의 별도 사



설에서도 “중국 지도자들은 남북 사이의 긴장을 중재해주는 것이 자신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중국은 이제 희생자와 함께 서서 공격자를 비난해야만 한다”고 촉구했음.

- 경제 일간 파이낸셜타임스도 전날 분석기사에서 “중국은 김정일의 변호사로서의 역할을 멈추고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을 제지하고자 하는 유엔 안보리의 강력한 결의에 동참할 수 있다”면서 “이는 후진타오 주석의 미 백악관 방문을 앞두고 보다 낫은 미중 협력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다”고 보도했음.
- 이 신문은 “북한이 완전한 핵보유국으로 변모하면서 국제사회는 야비한 김정일 정권의 도발에 맞서 무력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국제사회에서 더욱 큰 역할을 갈망하고 있는 중국이 바로 지금 이를 보여줄 기회”라고 강조했다.
- 영국 경제 주간 이코노미스트는 ‘북한에 대한 유죄판결’이라는 제목의 최근호 기사에서 “북한의 독재자 김정일이 천안함 사고 이후 지속적인 경제지원을 받기위해 급히 베이징을 방문했듯이 중국은 북한의 경제적인 생명선”이라고 풀이했음. 이 잡지는 “그 때만 하더라도 중국이 최소한 대중들 앞에서 김정일이 무죄라는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표명할 구실이 있었다”면서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다”고 말했음.
-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도 논평에서 “오랜 기간 중국의 우선순위는 북한이 아무리 제정신이 아니더라도 한반도에서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이란을 제재하는데 중국이 입장을 바꾼 지가 불과 며칠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 등을 통한 신속한 대응조치가 나올 것 같지는 않다”고 예상했음.
- 일간 텔레그래프는 “만약 중국이 세계 강국이 됐다고 자처하려면 북한 정권에 대해 천안함과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한 영향력을 미칠 필요가 있다”면서 “이란에 대한 유엔 제재 결의를 지지한 것과 마찬가지로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해야만 한다”고 촉구했음.

● “1분기 北주민 2만여 명 中방문”<VOA>(5/22)

-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북한 주민 2만 1천여 명이 중국을 공식 방문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2일 전했다. 이 방송은 중국의 관광정책을 담당하는 국가여유국이 최근 발표한 외국인 입국 통계를 인용, 북한 방문객이 2만 1천 2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0명 줄었다고 밝혔다.
- 성별로는 남성이 1만 8천 700명으로 88%를 차지해 2천 500명인 여성의 7.5배에 달했음. 연령별로는 45세에서 64세 사이가 1만 300명으로 가장 많았고 25~44세가 9천 100명, 15~24세가 1천 300명이었음. 방문 목적은 중국 내 근로 9천 200명, 사업 4천 100명, 관광 900명 순이었음. 7천 300명은 배를 타고 중국을 방문했으며 6천명이



항공편을, 3천 600명과 3천 300명이 각각 기차와 자동차를 이용했음.

- VOA에 따르면 같은 기간 중국을 찾은 외국인 가운데 한국인은 93만 3천 10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난해 1~3월의 75만 8천 600명보다 23% 늘었음. 절반에 달하는 41만 3천 700명(44%)이 관광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했고 사업 목적이 32만 2천 700명(34%), 근로활동 9만 2천명(10%), 친지방문 1만 6천명 순이었음.

● <긴급진단:천안함> “中, 대북제재 지지할 수도”(5/21)

- 천안함 침몰사건이 북한의 군사도발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오에 따라 중국이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지지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21일 나왔음. 다만 중국은 난민의 대규모 월경(越境)을 가장 우려하는 만큼 강력한 제재를 선호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 주평(朱鋒)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천안함 사건으로 중국이 북한과의 동맹관계를 재고하게 될 것이라고 이날 AFP에 밝혔음. 주 교수는 “모든 증거가 북한의 도발을 의미한다면 중국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중국으로선 북한을 바라보는 관점을 재고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음.
- 그러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제재를 부과하려고 (한국의) 조사결과를 검토한다면 내 생각에 중국도 지지할 것 같다”고 덧붙였음.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니콜라스 세체니 연구원도 이 같은 가능성에 동의하면서 다만 중국은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제재가 대규모 난민 유입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고 분석했음.
- 세체니 연구원은 “중국이 북한에 대한 태도를 즉각 바꿀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북한에 유화책을 쓰기 어려워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음. 주 교수와 세체니 연구원은 중국이 이란에 대한 추가제재에 이미 동의한 것처럼 결국 북한에 대한 제재 문제도 국제사회와 함께 행동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음.
- 홍콩 소재 중국대학교의 윌리 램 교수는 중국이 북한에 대해 공개적인 비난에 나설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분석했음. 램 교수는 “중국의 입장은 천안함 사건에 방해받지 말고 6자회담을 재개하자는 것”이라고 단언했음. 한국의 천안함 조사 발표 이후 중국 정부는 일단 냉정과 절제를 주문했음. 마자오쉬(馬朝旭)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한국 정부의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와 관련, “각국은 냉정하고 절제된 태도로 유관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해 한반도 정세의 긴장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北-中 경협 본격화되나.. 北인사 잇단 방중(5/21)

- 북한 인사들이 최근 잇따라 중국을 방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 당시 합의된 양국 간 경협을 실무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21일 중국의 외교 소식통과 연변(延邊)조선족



- 자치주에 따르면 북한 라진항의 배호철 항장이 지난 19일 연변(延邊) 조선족자치주 훈춘(琿春)시를 방문, 강호권 훈춘시장과 면담했음.
- 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라진항은 뛰어난 지리적 조건을 갖췄으며 바다 진출을 원하는 훈춘시의 전략 거점”이라며 “창리(創立) 등 중국기업들이 라진항을 통해 중국 남방은 물론 한국과 일본, 러시아 항로 개척을 추진 중인 만큼 적극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음.
 - 이에 대해 배 항장은 “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해 고위급 지도자와 경제 협력을 논의, 양국 변경지역의 협력에 더없이 좋은 환경을 만들었다”고 평가한 뒤 “훈춘시의 라진항을 통한 바다 진출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밝혔음.
 - 그는 “라진항 진출을 모색하는 중국 기업들과 논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롄(大連)에 본사가 있는 창리는 2008년 북한으로부터 라진항 1호 부두 사용권을 확보, 1호 정박지 보수공사를 통해 연간 150만t을 하역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음. 중국은 라진을 통한 동해 항로 개척을 위해 지난 3월 훈춘-함경북도 은덕군 원정리를 잇는 두만강 대교 보수공사에 착수, 이달 말 완공 예정임.
 - 중국 해관총서는 이달 초 훈춘-라진-상하이 항로 개설을 승인했음. 이 항로는 훈춘-원정리 다리 보수가 끝나는 대로 개통될 것으로 보임. 중국은 라진항을 이용한 한국과 일본, 러시아 항로 개척도 추진 중임. 배 항장의 방중에 앞서 지난 17일에는 김광훈 북한 외무성 중국국장을 대표로 하는 북한 방문단이 신의주 접경인 단둥(丹東)을 방문해 리수민(李樹民) 부서기와 면담했다고 외교 소식통들이 전했다.
 - 이 자리에서 양측은 오는 10월 착공 예정인 신압록강 대교 건설을 비롯해 북중 간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음. 북한은 지난해 10월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의 방북 당시 신압록강 대교 건설에 합의했음. 올 초부터 압록강의 섬인 위화도와 황금평을 자유무역지구로 개발하겠다고 중국을 상대로 투자자 유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 김 국장 일행의 방중 날짜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단둥 방문에 앞서 지난 13일 랴오닝(遼寧)성 푸신(阜新)시를 방문, 버섯 재배 농장을 시찰한 것이 확인됐음. 푸신시 관계자는 “상부의 지시로 김 국장 일행을 버섯 재배 농장에 안내했으나 방문 목적 등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고 말했음. 김 국장 일행의 이번 방중이 중국의 영농 기술 전수와 대북 투자가 모집 등 북중 경협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 지난 3~7일 중국을 방문한 김 위원장은 후진타오(胡錦濤) 국가 주석,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와 차례로 회담하면서 양국 간 경제무역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음. 특히 김 위원장이 방중 기간 다롄과 선양을 방문하는 등 동북지방에 큰 관심을 보여 북한과 동북지방 간



경협 가능성이 제기돼왔음.

● 中 “천안함 결과 평가작업 진행”(5/20)

- 중국 정부는 한국 정부의 천안함 조사결과에 대해 자체적으로 평가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자오쉬(馬朝旭)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이 사건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에 대해 찬성한다”면서 “한국 정부가 발표한 조사결과에 대해 현재 평가·분석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 그의 이 같은 발언은 한국의 조사 결과에 중국이 상당한 신뢰감을 갖고는 있지만 자체 정밀 분석작업을 통해 최종 판단을 내리겠다는 의도로 보임. 마 대변인은 그러면서 “각국은 냉정하고 절제된 태도로 유관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해 한반도 정세의 긴장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은 사안의 ‘시시비비’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국제 및 지역문제에 대응한다”면서 “중국은 일관되게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6자회담과 한반도의 비핵화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 그는 6자회담과 관련, “6자회담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동북아 지역의 장기적인 안정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면서 “우리는 각국이 소통을 강화해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는 천안함 사건의 결론과는 별도로 중국은 자국이 의장국인 6자회담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보임.
- 그는 이어 “천안함 사건은 불행한 사건으로 중국 정부는 사건 발생 후 수차례 한국 정부에 천안함 희생자에 대한 애도와 위로를 표명해왔다”면서 “이를 통해 한국인의 비통한 심정을 이해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중국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다”고 말했다.
- 추이톈카이(崔天凱) 중국 외교부 부부장도 이날 오전 미·중 전략경제대화 관련 기자회견에서 “천안함 사건을 적절히 처리하는 것과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것이 각국 인민의 공통된 열망이며 유관 당사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 정부는 이날 오전 민·군 합동조사단을 통해 천안함이 북한의 중거리 공격으로 침몰했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음.

● <긴급진단:천안함> 中전문가 논평.. 진징이 교수(5/20)

- 중국의 북한문제 전문가인 진징이(金景一) 베이징대 조선문화연구소 소장은 20일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한 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 한국은 북한과 대화로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 진징이 교수는 이날 인터뷰에서 북한이 국방위원회 대변인 명의로 발표한 성명을 통해 남한에 검열단을 파견하겠다는 것은 대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해석하고 한국은 이를 수락, 북한과 대화에 나서 슬기롭고 지혜롭게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 진 교수는 한반도에서 최대 관건은 전쟁이나 국부적인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계당사자들이 공동 노력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한국의 군사적 보복이나 유엔 안보리를 통한 대북 제재 추구는 한반도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뿐이라고 우려를 표시했음.
- 그는 한국 측의 조사 결과는 아직은 일방적인 주장이고 북한은 이를 전면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남북 간 이견이 해소돼야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음. 진 교수는 중국이 이번 사건과 관련, 북한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한국인에 눈에 비치고 있으나 중국은 일방적으로 북한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에 파고가 높아지고 긴장이 악화되는 것을 바라지 않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한반도에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중국도 남북한에 못지않게 심각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번 천안함 사건의 사태진전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는 것임.

● <긴급진단:천안함> 中 전문가 논평.. 장렌구이 교수(5/20)

- 중국의 북한 문제 전문가인 장렌구이 공산당 중앙당교 교수는 20일 한국의 천안함 침몰사건 조사 결과 발표는 믿을 만하다고 말하고 그러나 한국이 이번 사태를 신중히 처리할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음.
- 장렌구이 교수는 이날 인터뷰에서 자신은 이번 사건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기 때문에 결론을 내기 힘들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이번 조사에 초청을 받은 외국 전문가들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에 임했다면 조사 결과 발표를 신뢰할 수 있다고 말했음.
- 장 교수는 천안함 침몰로 많은 사상자가 났기 때문에 보복을 해야 한다는 일부 한국인의 심정에 이해가 간다고 말하고 그러나 군사 충돌이 발생하면 한국에도 아무런 좋은 점이 없기 때문에 한국 측이 다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를 바란다고 권고했음.
- 그는 이어 한국은 피해당사자이기 때문에 이번 사건과 관련, 북한을 제재하는 결의안을 유엔에 제출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고 이해도 간다고 말했음. 장 교수는 한국이 이날 조사 결과 발표에 앞서 관련국들에 내용을 통보한 것은 유엔 안보리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합당한 조치라고 논평했음. 그는 이어 중국의 일부 관리가 천안함 사건과 관련, 북한 측의 주장을 전달한 적은 있지만 중국이 공식적으로 북한의 관련 여부에 언급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중국 관리들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논평을 자제하고 신중한 자세로 임하고 있다고 그는 전했다.

● <긴급진단:천안함> 中 전문가 논평.. 류장용 교수(5/20)

-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공격을 받고 침몰했다는 한국의 조사 결과 발표는 남북관계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냉정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란 논평이 중국에서 나왔음.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류장용(劉江永) 칭화(淸華)대 국제문제연구소 교



수는 20일 연합뉴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남북 간에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발표가 나와 관련국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고 말하고 한국 측이 침착하고 냉정하게 대처할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 류장용 교수는 한국의 발표내용만으로는 북한의 어뢰공격이라는 것을 확신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전제하고 무력보복과 안보리의 대북 군사적 제재는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논평했음. 류 교수는 무력보복은 한국 일부에서 나올 수 있는 주장이지만 한국 정부와 국민 간에 일치된 의견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한국 정부가 냉정을 유지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태와 관련, 군사적 합의가 포함된 결의안을 유엔 안보리에 제출하면 회원국들의 일치된 지지를 얻기 힘들 것이라고 내다보고 한국 정부가 유엔에 대북 결의안을 제출할 수는 있겠지만 이미 핵문제로 유엔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을 압박하는데 실효가 있겠느냐고 반문했음.
- 류 교수는 천안함 사건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남북한 어느 측에도 한편으로 기울이지 않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것이라고 밝히고 천안함 침몰의 원인이 어디에 있건 이로 인해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이 깨지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그는 천안함 사건 조사 결과와 관련, 북한 측의 의견도 들어본 후 제3자가 정확하고 객관적인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하고 한국 정부가 급하게 결론을 낼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 中 “냉정과 절제로 한반도 긴장 막아야”(5/20)

- 마자오취(馬朝旭)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우리 정부의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와 관련, “각 국은 냉정하고 절제된 태도로 유관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해 한반도 정세의 긴장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마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의 조사결과 발표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중국은 조사결과를 주목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답변했음.
- 그는 이어 “천안함 사건은 불행한 사건으로 중국 정부는 수차례 한국 정부에 천안함 희생자에 대한 애도와 위로를 표명해왔다”면서 “이번 사건에 대한 한국인의 비통함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중국은 일관되게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6자회담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 中 “한반도 평화·안정 각국 이익에 부합”(5/20)

- 추이텐카이(崔天凱)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20일 “천안함 사건을 적절히 처리하는 것과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것이 각국 인민의 공통된 열망이며 유관 당사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추이 부부장은 이날 외교부에서 열린 미·중 전략경제대화 관련 기자회견에서 “천안함 사건은 불행한 사건”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 그의 천안함 관련 발언은 “한국의 민·군 합동조사에서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공격으로 침몰한 것으로 결론 났는데 그에 대한 중국의 입장이 무엇이나”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나왔음. 추이 부부장은 이어 북핵 6자회담과 관련해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 안정에 큰 역할을 해왔다”며 “중국은 유관 당사국들이 공동노력해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음.
- 그는 아울러 “중·미 전략대화에서 양자문제 외에 지역과 전 지구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고 심도 있는 의견교환을 할 것”이라고 말해 천안함 침몰사건도 전략대화에서 논의될 수 있음을 시사했음.

● 中 훈춘-北원정리 대교 이달 말 개통(5/18)

- 중국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 훈춘(琿春)과 북한의 함경북도 은덕군 원정리를 잇는 두만강 대교 보수 공사가 이달 말 완공될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중국의 동해 진출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임.
- 훈춘시 관계자는 1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훈춘 취안허(圈河) 통상구와 원정리를 잇는 다리 보수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돼 공기가 단축됐다”며 “예정보다 한 달여 빠른 오는 30일 완공돼 차량 통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음.
- 이 다리는 훈춘과 북한의 라진항을 연결하는 북·중 교역 통로로, 중국은 라진항 이용을 위해 지난 3월 15일 노후한 이 다리 보수공사에 착수했음. 이 공사는 애초 6월 말 완공 예정이었음. 이 다리 보수공사가 예상보다 일찍 마무리됨에 따라 훈춘에서 라진항을 거쳐 남방으로 가는 중국의 해상 항로 가동이 앞당겨질 전망이다.
- 중국 해관총서는 이미 이달 초 훈춘-라진항-상하이 해상 항로 개설을 승인했음. 이는 헤이룽장(黑龍江)과 지린(吉林) 등 동북에서 생산되는 풍부한 지하자원과 곡물이 이 해상 항로를 통해 남방으로 수송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음을 의미함.
- 중국은 우선 올해 훈춘에서 생산되는 10만톤의 석탄을 상하이항을 통해 남방으로 운송할 계획임. 이 해상 항로가 본격화되면 연간 100만톤 이상의 물자가 라진항을 거쳐 남방으로 운송될 것으로 보임. 중국 창리그룹은 2008년 라진항 1호 부도 독점 사용권을 확보, 동해 진출 교두보를 확보했으며 이미 3천만 위안(50억 원)을 투자해 연간 150만톤의 하역 능력을 갖춘 라진항 1호 부도 1기지 정박지 보수공사를 마쳤음.
- 창리는 화물 수송량이 늘어나는 추이를 살피 조만간 2기와 3기 정박지 보수공사도 추진할 계획이어서 중국의 라진항 화물 운송량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 북한과 중국은 지난해 라진항을 보세 가공 등이 가능한 국제 물류 기지로 협력개발하는 데도 합의했음. 연변자치주의 한 기업가는 “라진항을 이용한 동해 뱃길이 열리면 풍부한 동북의 지하자원과 곡물이 남방은 물론 해외로 수출할 수 있는 물꼬가 트인다”며 “두만강



유역이 동북아 물류 거점으로 부상할 수 있는 확실한 기반을 마련하게 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음.

● 장신썬 “北, ‘천안함과 무관’ 입장 전달”(5/17)

- 장신썬 주한 중국대사는 17일 천안함 사태와 관련, 북한으로부터 이번 사건과 북측은 무관하다는 입장을 전달받은 것으로 말했다고 민주당 최문순 의원이 전했다.
- 최 의원에 따르면 장 대사는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 정세균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최근 방중 때 천안함에 대한 북측의 입장을 전달받았느냐’는 질문에 대해 “김 위원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지는 않았지만 무관하다는 입장을 전달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는 것임. 최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박병석 의원이 ‘왜 김 위원장을 통해 받은 것을 발표안하냐’고 물으니깐 장 대사가 ‘김 위원장의 입을 통해 들은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북측은) 무관하다’고 했다”고 소개했음.

라. 일·북 관계

● 하토야마, 자위대에 대북 경계강화 지시(5/22)

-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총리가 자위대에 북한에 대한 경계강화를 지시했다고 교도(共同)통신이 22일 보도했음. 하토야마 총리는 이날 오전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외상, 기타자와 도시미(北澤俊美) 방위상, 히라노 히로후미(平野博文) 관방장관 등을 관저로 불러 천안함 침몰과 관련한 대응 방안을 협의했음.
- 이 자리에서 하토야마 총리는 자위대에 의한 경계 감시 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정보수집을 강화하도록 지시했음. 기타자와 방위상은 “항공기와 레이더망에 의한 상시 감시체제를 더욱 철저히 하고 있다고 총리에게 보고했다”면서 “긴장감을 갖도록 각 부대에 지시하고 있다”고 밝혔음. 하토야마 총리는 관계 각료들과 북한의 동향 등 최근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향후 한국 미국과 공조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음.
- 일본 정부는 당초 이날 하토야마 총리 주재로 국가 안전보장회의를 열 계획이었으나 이를 보류하고 일단 24일 예정된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등 한국의 대응을 지켜보기로 했음.

● “日, 한국 천안함 안보리 제기 지지”(5/20)

- 일본 정부는 북한의 공격에 의한 천안함 침몰과 관련, 한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지지하기로 했다고 교도통신이 20일 보도했음. 이 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인 히라노 히로후미(平野博文)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국제민관 합동조사단의 천안함 침몰 원인 조사결과 발표와 관련해 이런 의사



를 표명했음.

- 일본 정부는 천안함 침몰 원인 조사발표와 관련,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총리 주재로 이날 낮 관계각료 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함. 일본 정부는 북한에 대해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뒤흔들었다”고 강력하게 비난하는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추가 제재를 염두에 두고 한국·미국과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음.
-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외상은 참의원 외교국방위원회에서 “일본에도 어떤 사태가 일어날지 모른다. 냉정하고 확실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말했음. 기타자와 도시미(北澤俊美) 방위상은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다. 한국 측이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주시하겠다. 자위대도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음.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향후 미국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도록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 <긴급진단:천안함> 日, 한미와 철저 공조(5/20)

- 일본 정부는 한국의 천안함 침몰 원인 조사와 향후 대응을 전면 지지한다는 입장임. 일본 정부는 20일 낮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총리 주재로 긴급 관계 각료회의를 열고 천안함 침몰 원인 발표와 관련한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음.
- 일본 정부는 이날 각료회의에서 천안함 문제 대응에서 한국을 지지하는 한편 철저하게 한국, 미국과 행동을 함께 하기로 했음. 하토야마 총리는 “북한의 행동을 용인하기 어렵다”면서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히 비난한다”고 밝혔음.
- 이는 미국 백악관이 이날 “북한의 이번 공격 행위를 강력히 비난한다. 이번 공격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며 국제법 위반으로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도전”이라고 선언한 것과 맥을 같이함. 하토야마 민주당 정부는 작년 9월 출범이후 대북 정책에 관한한 한국, 미국과 공조한다는 기본 방침을 견지하고 있음. 이에 따라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6자 회담과 유엔의 경제 제재,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 등을 패키지로 묶어 한미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해왔음.
- 따라서 천안함 문제도 이런 기존 대북 정책의 연장선에 있음. 일본은 천안함 침몰이 북한 공격에 의한 것으로 판명된 만큼 일본도 언제 공격 대상이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감추지 않고 있음.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외상은 참의원 외교국방위원회에서 “일본에도 어떤 사태가 일어날지 모른다. 냉정하고 확실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말했음.
- 따라서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국, 미국과 강력한 결속력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동아시아의 안전보장 문제에서 일본의 공헌을 부각시켜보겠다는 의도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은 한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천안함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지지한다는 입장이며,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도록 미국 정부에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음.

- 일본의 독자적인 대북 경제 제재도 강화하고 있음.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북한 선박의 입항 금지 등의 독자적 대북 제재를 1년 연장하기로 했고, 지난 19일에는 북한을 겨냥한 화물검사특별조치법을 중의원에서 가결했음.

● 하토야마 “北 용인 어렵다” 강력 비난(5/20)

- 일본의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총리가 20일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한 국제 민간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발표와 관련, 북한의 행동을 용인하기 어렵다고 강력히 비난했음.
- 하토야마 총리는 이날 낮 한국의 천안함 침몰 원인 조사발표와 관련, 긴급 관계 각료회의를 소집해 이같이 밝혔음. 하토야마 총리는 “천안함 침몰 원인의 조사 결과에 대해 한국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들었다”면서 “일본은 한국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말해 천안함 문제에 대한 한국의 대처에 지지 입장을 분명히 했음. 그는 이어 “북한의 행동은 용인이 어렵다”면서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히 비난한다”고 밝혔음.
- 그는 “향후 대응에서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한국, 미국을 비롯한 관계국과 긴밀한 공조와 협력을 해나가겠다”고 말했음. 하토야마 총리는 천안함 침몰 원인 조사에 대해 “한국의 군과 민, 각국의 전문가가 참가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를 진행한 것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한국 정부는 이번 사건이 북한에 의한 어뢰공격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명백히 했다”고 강조했다.
- 이날 관계 각료 회의에는 히라노 히로후미(平野博文) 관방장관,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외상, 기타자와 도시미(北澤俊美) 방위상, 나카이 히로시(中井浩) 공안위원장 겸 납치문제담당상, 사민당 당수인 후쿠시마 미즈호(福島瑞穂) 소비자담당상, 국민신당 대표인 가메이 시즈카(亀井静香) 금융상이 참석했음.

● “日도 천안함 문제 한국 전면지지”(5/19)

- 일본 정부가 천안함 침몰과 관련 한국 정부의 대처를 전면 지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9일 보도했음. 이 신문은 한국의 국제합동조사단이 천안함 침몰 원인 조사보고서를 발표하면 일본 정부가 한국을 전면 지지한다는 견해를 표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 및 미국과 보조를 맞춰 북한의 도발행위를 봉쇄하면서 북한에 대한 압력을 강화할 방침임.
-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총리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전화로 이런 일본 정부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임. 하토야마 총리는 18일 오후 관저로 나카이마 히로시(中井浩) 공안위원장 겸 납치문제담당상을 불러 천안함 침몰이 북한에 의한 공격으로 판명될 경우의 대응 방안



을 협의했음. 히라노 히로후미(平野博文) 관방장관은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공격에 의한 것일 경우 6자회담이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음.

-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외상은 천안함 침몰 조사 결과와 관련 “내용에 따라서는 중대한 사태가 될 수 있다”면서 “일본이 공격의 표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단언할 수 없다”고 경계감을 표시했음.

마. 기 타

● “北역류 곶즈 씨, 美정부측 추가면담” <RFA>(5/22)

- 미국의 이익을 대리하는 평양 주재 스웨덴대사관이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아이잘론 말리 곶즈(30) 씨를 추가 면담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2일 전했다. RFA는 미국 국무부 관리의 말을 인용, 스웨덴대사관 관계자가 지난 7일 곶즈 씨를 면담했으며 미국 정부가 북한 당국에 지속적으로 영사적 접촉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 앞서 미국 정부는 3월 14일과 15일 같은 방법으로 곶즈 씨를 면담했음. 북한은 1월 25일 북·중 국경을 넘어 불법입국한 미국인을 조사중이라고 밝혔으며, 억류된 곶즈 씨는 재판에 넘겨져 조선민주주의적대죄 등의 혐의로 8년의 노동교화형과 7천만원(북한 원화 기준)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음. 북한은 지난해 12월 무단 입북한 재미동포 인권운동가 로버트 박 씨를 체포해 40여일 만에 석방했으며 작년 3월 북·중 접경지대에서 취재하다 북한 경비병에 붙잡힌 여기자 로라 링 씨와 유나 리 씨는 140일 만에 풀려났음.

● 인도, 천안함 사건 규탄 성명(5/21)

- 인도 정부가 21일 천안함 침몰 사건을 규탄하고 피해 당사자인 한국에 애도의 뜻을 표했음. 인도 외무부는 이날 발표한 ‘한국의 천안함 침몰’ 제하 성명을 통해 “한국 정부는 천안함 침몰사건 원인 규명을 위한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 내용을 우리와 공유했다”며 “우리는 이번 사건을 규탄하며 비극적 인명손실과 관련 한국 정부에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음. 성명은 이어 “인도는 대한민국이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성숙함과 자제력을 갖고 이번 사건을 처리해 온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 前북한주재 스웨덴 대사 “北군사도발은 자살”(5/21)

- 북한이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에 대해 전쟁 위협으로 맞서고 있으나 군사적 도발에 나서는 것은 자살행위라고 인골프 키소 전 북한 주재 스웨덴 대사가 21일 경고했음.
- 지난 1979년부터 1982년까지 북한 주재 스웨덴 대사를 지낸 그는 이날 스웨덴 일간지 다겐스 뉴헤테르(DN)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과거에도 전쟁 위협을 해왔지만 단순한 수사에 불과한 경우가 많았다”면서 그러나 “북한이 실제로 군사적 모험을 감행할 경우 자살행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키소 전 대사는 그 이유로 “북한군이 현대적이지 않고, 중국으로부터 확고한 지지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남북한, 일본, 홍콩, 인도 등에서 근무한 키소 전 대사는 스웨덴의 대표적인 동아시아 전문가로, 현재 스웨덴 안보개발정책연구소의 선임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음. 키소 전 대사는 또 “상황이 중요한 국면에 진입했고, 이제 중국의 역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면서 중국은 북한의 전통적인 우방이지만 천안함 사건은 어려운 문제라고 지적했다.
- 그는 “이번에는 중국도 속내를 보여 줘야만 하는 상황”이라면서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이 문제가 논의될 때 중국이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에 동의하더라도 놀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키소 전 대사는 6자회담이 당분간 재개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음. 그는 “북한의 공식 사과 없이는 재개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 그러나 스웨덴 국제문제연구소의 리누스 하그스트롬 소장은 이 신문에 6자회담이 ‘일종의 내재적 역동성’을 갖고 있다면서 “과거에도 위기 후에는 회담이 재개됐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음.
- 한편 칼 빌트 스웨덴 외무장관은 이날 자신의 개인 홈페이지에서 이번 사건을 통해 북한 정권의 본질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됐다고 밝혔다. 빌트 장관은 “이번 범죄(천안함 공격)의 이유에 대해서는 추측만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번 사건은 북한 정권의 본질에 대한 새로운, 그리고 심각한 의문을 던지고 있다”고 말했다.
- 그는 또 “스웨덴은 한국과 긴밀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우리가 전문가 파견을 통해 이번 조사에 기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 러 상원의장 “한반도에 새 긴장 우려”(5/21)

- 세르게이 미로노프 러시아 연방의회(상원) 의장은 21일 천안함 사태를 계기로 한반도에서의 새로운 긴장이 조성될 수 있음을 경고했음. 미로노프 의장은 이날 한국 언론재단 대표단을 면담한 자리에서 “이번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한 공식 조사가 끝날 때까지 어떤 결론도 내리고 싶지 않다”면서 “모든 사실이 드러날 때까지 서로를 비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사태 때문에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는 그런 비극적 상황을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 미로노프 의장은 앞서 지난해 11월 평양을 방문, 북한의 김영일 내각 총리,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만나고 돌아온 바 있음. 한편,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극동문제연구



소 알렉산드르 제빈 소장 역시 천안함 사태로 남북한 대립 국면이 조성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음.

-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제빈 소장은 이날 일간지 콤포몰스카야 프라브다와의 인터뷰에서 “관련국들이 이번 비극을 통해 대립 관계를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유사 사건 재발을 막을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음.
- 그는 이번 천안함 사건이 누구의 잘못이든 상관없이 러시아 정부는 중국과 함께 남북한을 6자회담으로 끌어내는 데 중점을 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천안함 사태로 전쟁이 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다만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북한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키고, 북한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보인다”고 덧붙였다.

● 나토·EU, 천안함 사건 北 규탄(5/21)

- 해군 초계함 ‘천안함’이 북한 어뢰 공격으로 침몰했다는 한국 정부의 조사결과 발표에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와 유럽연합(EU)도 북한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 나토는 20일 “다국적 조사단에 의해 규명된, (한국 함정) 천안함의 침몰을 초래한 북한의 행동을 강력히 규탄한다. 나토는 한국 수병 46명의 희생에 애도를 표하며 이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북한의) 폭력행위를 비난한다”고 밝혔음.
- 나토는 “북한에 의한 천안함 침몰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자 (동북아시아) 지역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나토는 북한이 국제사회에서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또 EU 외교 총책임 캐서린 애슈턴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이하 외교대표)도 아프리카 순방 중 성명을 내 “북한이 연루됐다는 증거가 제시된 조사단의 조사결과는 극히 우려스럽다”면서 “조사결과를 토대로 나는 (북한의) 이처럼 악질적이고 지극히 무책임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음.
- 애슈턴 외교대표는 그러면서 “EU는 조사결과에 따른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하는 데 한국 정부 및 다른 이해당사자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 등 국제사회의 대응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음.
- 한편, 이날 정부의 조사결과 발표에 앞서 박준우 주(駐) 벨기에·EU 대사는 19일 EU 집행위와 나토를 잇따라 방문해 천안함 침몰사건 조사 결과를 사전 설명하고 향후 한국 정부의 대응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줄 것을 당부했음.

● 호주 의무 “北 천안함 공격 국제법 위반”(5/21)

- 천안함 침몰원인이 북한의 군사도발이라는 한국의 조사 결과에 대해 호주 정부도 21일 지지 의사를 표명했음. 스티븐 스미스 호주 의무



장관은 이날 퍼스에서 기자들에게 “천안함이 의심할 바 없이 북한 어뢰의 공격을 받아 침몰했다”면서 “국제법과 1953년 정전협정을 위반한 북한의 이 같은 행동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이라고 규정했음.

- 스미스 장관은 이어 한국 정부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협력하고 있다면서 국제사회가 북한을 강력하게 비난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음. 케빈 러드 호주 총리도 전날 천안함 사태를 ‘적대적이고 정당성이 없는 행위’로 규정하고 “국제사회는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음.

● <긴급진단:천안함> 태국 “매우 유감스러운 일”(5/21)

- 태국 외교부는 21일 “천안함 조사결과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면서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인한 인명손실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음. 외교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북한이 어뢰로 천안함을 공격한 것은 유엔(UN) 헌장을 명백하게 위반한 행위”라면서 깊은 우려를 표명했음.
- 외교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국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6자 회담의 조기 개최 등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가져오기 위한 노력이 좌초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음. 태국은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ASEAN) 회원국 10개국 중에는 처음으로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성명을 발표했다.

● <긴급진단:천안함> 러시아 정부 신중한 반응(5/20)

- 우리 정부가 20일 천안함 참사를 북한의 소행으로 발표한 가운데 북핵 6자회담 당사자인 러시아는 다소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음. 러시아 정부는 이날 민·군 합동조사단의 천안함 사건 조사결과 발표에 대해 아직 공식적인 반응을 내 놓지 않고 있음.
- 다만 안드레이 네스테렌코 외무부 대변인이 이타르타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천안함 침몰 원인과 관련한 확실한 증거를 러시아는 갖고 있지 못하다”고 언급해 주목됨.
- 이미 우리 정부가 주한 러시아 대사를 통해 사고 조사 결과를 사전 브리핑하고 이번 사건이 북한의 소행임을 단정할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비공식적이긴 하지만 외무부 당국자의 입에서 이런 발언이 나온 것임. 러시아 정부가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국방 전문가들로 하여금 과학적 판단을 내리게 하겠지만 국제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100% 신뢰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게 관측통들의 분석임.
- 그동안 러시아는 천안함 사태에 대해 우리 정부의 조사 활동을 존중한다고만 얘기할 뿐 사고 원인을 둘러싸고 일체의 언급을 자제해 왔음. 러시아가 조사 결과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한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 북한에 제재를 가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로서는 또 하나의 난제를 맞게 될 것으로 보임. 특히 러시아는 대북 제재가 능



- 사가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음.
-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가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보리 제재는 상징적 조치일 뿐 실질적으로 북한을 압박하는 데 별 의미가 없고 오히려 북한의 반발만 사 역효과만 가져올 뿐이라고 보고 있음.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산하 경제연구소의 게오르기 톨레라야 박사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인 것으로 발표됐지만, 러시아는 대북 제재에 대해 찬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음.
 -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제재가 북한의 경제적 고립으로 이어져서는 안 되며 한반도 비핵화 실현 가능성 여부에 따라 언제든지 제재는 중단될 수도 있다는 입장임. 따라서 우리 정부가 북한이 무력행사를 금지한 유엔헌장 2조 4항과 1953년 체결된 정전 협정을 위반했다는 점을 최대한 부각하면서 북한을 압박하겠지만, 북한 제재와 관련해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하는 데에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게 관측통들의 분석임.
 - 러시아는 또 국제사회에서 제재 논의가 진행되더라도 북핵 6자회담은 반드시 재개돼야 하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이라는 원칙론을 당사국들이 견지해야 한다고 주문할 것으로 예상됨. 우리 측의 한 외교 소식통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며 6자회담 당사국인 러시아는 우리의 주요한 협력 대상”이라면서 “그간 북한 문제와 관련해 러시아가 보여준 태도를 고려하면 이번 천안함 사건도 우리 정부의 견해를 십분 이해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음.

● 獨언론 “한국전 이후 최악 군사충돌”(5/20)

- 독일 언론은 20일 천안함 사고 조사결과 발표와 주변국 움직임을 신속하고 상세하게 보도했음. 일간지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FAZ)과 시사주간지 슈피겔 등 주요 언론은 인터넷판을 통해 “공식 조사 결과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해 천안함이 침몰했고 북한 서체의 일련번호가 적힌 어뢰 프로펠러 잔해 등 관련 증거가 발견됐다”면서 이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이 단호한 대응을 천명했다고 말했음.
- 독일 언론은 또 미국은 조사 결과가 객관적이고 과학적이라고 평가한 반면 북한은 조사가 조작된 것으로 전면전도 불사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공영 ARD 방송도 사고조사 결과 발표 직후인 이날 새벽 4시(한국시간 오전 11시) 정규 뉴스 시간에 이번 사건을 약 25초간 보도하는 등 큰 관심을 나타냈음.
- 한편 일간지 프랑크푸르터 룬트샤우는 이번 사건을 “한국전 이후 57년 만에 최악의 군사적 충돌”이라고 규정하면서 이번 사건의 배경, 조사 결과, 대응 등을 놓고 미국, 일본, 중국 등 주변국들이 각기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음.



● 英 “北 인명 경시.. 한국과 긴밀 협조”(5/20)

- 영국 정부가 20일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한 국제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가 나오자 즉각적이고 강도 높은 성명을 발표했다. 영국 정부는 윌리엄 헤이그 외교장관 명의의 성명에서 “국제사회와 영국은 이번 만행에 대한 적절한 다자적 조치를 고려하는 동시에 한국과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 영국 정부는 “북한의 일련의 행동들은 국제사회의 불신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이번 공격은 북한이 인간생명을 무참히 경시하고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의무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 영국 정부는 또 “영국 조사단은 한국 및 국제 전문가들과 함께 사고 원인 규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왔다”면서 “영국 조사단은 조사작업 과정의 객관성과 정밀성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조사 결과의 정확성에 대해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조사결과가 발표된 시간은 한국 시간 오전 10시, 영국 시간으로 오전 2시인데도 불구하고 외교장관 명의의 공식 성명이 발표돼 양국 간 사전에 긴밀한 협의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음.
-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전날 윌리엄 헤이그 영국 신임 외교장관과 대응 방안을 협의하고, 추규호 주영 한국대사는 신임장 제정을 전후해 영국 및 각국 외교 사절들을 만나 우리 측 입장을 설명했다. 추대사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에게 신임장을 제정하기 위해 버킹엄궁을 예방한 자리에서도 여왕은 한국전 60주년의 의미를 강조하고 한반도 안보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 영국 연립정부는 출범 이후 첫 외교 성명을 내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임을 의식해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풀이됨.

● <긴급진단:천안함> 러시아 전문가 반응(5/20)

-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산하 경제연구소 게오르기 톨레라야 박사는 20일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인 것으로 발표됐지만, 러시아는 대북 제재에 대해 찬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음.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그는 이날 국제 민군합동조사단의 천안함 사건 조사 결과 발표 후 연합뉴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중국은 물론 러시아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대북 제재에 찬성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그는 “과거 사례에서도 보듯 대북 제재를 한다고 해도 북한의 행동은 결코 변한 것이 없다”면서 “러시아 당국은 제재가 북한 지도부에 통하지 않을 것이며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 그는 안보리 대응이 군사적 대응을 배제한 상태에서 한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외교적 대응카드이겠지만 이미 작동



중인 유엔 결의 1718호와 1874호에 더해 추가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음.

- 또한 “천안함 사태가 분명히 한반도 평화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것은 사실이다”고 강조하면서 “하지만 이번 일이 6자회담 재개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음. 러시아 정부는 그간 북한의 성의 있는 대화 노력을 촉구하면서도 2005년 9.19 공동 성명 합의 원칙 아래 6자회담이 신속히 재개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음.
- 북핵 6자회담 내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실무그룹 회의 의장국인 러시아는 자국의 대(對) 아시아 전략에서 중요한 통로 역할을 하는 6자회담 틀이 붕괴하는 것을 극히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내에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중립적인 인사로 꼽히는 톨레라야 박사는 또 “러시아로서는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한 모든 정보가 있어야 할 것이고 그 정보에 대한 정확한 분석 이후 어떤 행동을 취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음.

● “유럽의회 北방문시 천안함 문제제기”<RFA>(5/20)

- 6월초 북한을 방문하는 유럽의회 한반도관계대표단은 천안함 사태의 원인이 북한 공격으로 밝혀지면 방북 기간에 이 사태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것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0일 전했다. 이 방송에 따르면 유럽의회 한반도관계대표단 사무국의 월터 마수어 국장은 이메일을 통해 “천안함 침몰의 원인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사 결과가 발표되면 유럽연합이 공식 입장을 갖게 될 것 같다”고 밝혔음.
- 마수어 국장은 “내달 2일 한반도관계대표단이 회의를 갖고 북한 방문의 최종 안건을 결정하며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구체적인 대응방안도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반도관계대표단이 내달 4일 평양을 방문할 때 북한 당국자들에게 천안함 침몰 사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유럽연합의 의견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고 RFA는 전했다.
- 한반도관계대표단은 내달 4일부터 12일까지 평양과 서울을 차례로 방문하며 유럽의회는 대표단의 방북에 앞서 이르면 이달 중 대북 인권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임.

● 프랑스 외교부 “北 무자비한 폭력 중단해야”<RFA>(5/20)

- 프랑스 정부는 20일 한국 정부의 천안함 침몰 사건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지지 입장을 밝히고 북한을 강력히 비난했음. 프랑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발표를 통해 북한의 어뢰 공격을 ‘무자비한 살인적 폭력’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음.
- 외교부 대변인은 “베르나르 쿠슈네르 외교부 장관이 한국의 유명한 장관으로부터 국제 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설명 들었다”면서 “이에 쿠슈네르 장관은 정부 차원의 전적인 연대를 약속했다”고 밝혔음. 이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 측이 무자비한 폭력 행위를 포기하고 국



제 사회로 복귀해 협상 테이블에서 평화적인 대화의 장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 美CIA “北경제 2년 연속 3.7%씩 성장”(5/19)

- 북한이 화폐개혁과 시장폐쇄로 인한 경제 부작용 속에서도 작년 2년 연속으로 경제 성장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은 최근 발표한 ‘2010 월드팩트북’에서 북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2008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3.7% 증가했다고 추정했음. 2007년 2.3% 감소했던 점을 감안하면 2년째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조사대상 213개 국가 중에서는 47위였고 한국은 0.2% 올라 108위에 그쳤음.
- CIA는 북한 경제가 성장세를 나타낸 이유로 유리한 기후와 주변국의 에너지 원조 등을 꼽았음. 하지만 전 세계 물가와 환율이 동등하다고 가정하고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을 따지는 구매력지수(PPP) 기준 1인당 GDP로는 북한이 지난해 1천900달러로 조사대상국 227개국 중 188위에 머물렀음. 2008년의 1천800달러보다는 조금 늘어난 것으로 캄보디아, 라오스 등과 비슷한 수준임.
- 한국의 PPP 기준 1인당 GDP는 2만 8천 달러로 49위였으며 유럽의 리히텐슈타인이 12만 2천 100달러로 1위, 미국이 4만 6천 400달러로 11위, 일본이 3만 2천 600달러로 42위였음. 북한의 지난해 GDP는 282억 달러로 실업률이나 빈곤층 비율은 집계되지 않았음.

● “천안함 北소행 확인돼도 ‘보복’ 제한적”<CNN>(5/19)

-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한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발표가 오는 20일로 예정된 가운데 한국 내에서는 이미 북한 개입을 전제로 여러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미국 CNN 인터넷판이 18일 보도했음.
- CNN은 조사 과정에서 수거된 무기 파편이나 화약 종류 등으로 미뤄 북한 잠수정에 의한 공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한국 정부가 북한을 공식 지목한다고 해도 ‘보복 대안’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했음.
- CNN은 천안함 침몰이 북한 공격에 의한 것으로 결론이 나면 우선 군사적 보복 가능성이 상정될 수 있다고 진단했음. 실제 한국 내에서는 보수진영을 중심으로 군사보복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으나 서해상 공중폭격이나 해상공격 등의 가능성은 낮으며 권고할 만한 대안도 아니라는 지적이 우세하다고 CNN은 전했다.
- 한국국방연구원 백승주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은 “북한이 개입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한국 정부로서는 군사적 대응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서 “그러나 이는 한국이 보복에 나설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음. 이처럼 전문가들이 군사적 보복 가능성을 낮게 보는 이유에 대해 CNN은 북한의 핵 잠재력 등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음. 보복공격은 남북 간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북한이 핵무기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한미 연합군의 전력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험성이 너무 높다는 분석임.

- 아울러 과거 1987년 KAL기 폭파사건, 1968년 북한 공작원의 청와대 습격 기도 등 더 심각한 사태에서도 군사적 보복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CNN은 설명했다.
- 그러나 대(對) 잠수정 장비 확보, 조기경보시스템 확충 등을 위한 국방비 증액이나 오는 2012년으로 예정된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연기와 함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등을 통한 군사적 대북 압박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을 통한 외교적 해결책도 대응방안의 하나로 검토될 수 있다고 CNN은 전망했음.
- 다만 이미 북한이 지난해 제2차 핵실험으로 인해 제재를 받고 있는 데다 유엔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중국과 긴밀한 관계라는 점에서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음. 이런 연장선상에서 한국 정부가 경제적 대응에도 나설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음.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교역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임.
- 이와 관련, 한국 정부는 이미 최근 정부 유관기관에 대해 대북사업 집행을 보류할 것을 요청하는 등 북한으로 흘러들어 가는 ‘돈줄’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고 CNN은 전했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인해 남북 간 상징적인 의미가 큰 개성공단이 폐쇄될 것으로 예상하는 전문가들은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 특히 한국은 북한이 유럽 내 은행에 예치하고 있는 금융자산을 동결하기 위해 유럽연합(EU)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음. 군사·외교·경제적 압박 외에도 대북 선전전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음. 백승주 센터장은 “외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체제를 건드리는 것을 북한이 가장 싫어한다는 점을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음.
- 한편 뉴욕타임스(NYT)도 이날 인터넷판을 통해 한국 정부는 천안함 침몰이 북한 어뢰 공격에 의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으며, 후속 대응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음. 그러나 NYT는 한국이 확보한 증거가 향후 중국으로 하여금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결의안 채택에 찬성할 수 있는 수준인지는 불명확하다고 지적했음. 또 이 신문은 한국 정부가 군사보복은 논외로 하고 있으며 남북 간 교역을 대폭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음.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긴급진단:천안함> 유엔사 채널 가동되나(5/21)

- ‘북한에 의한 소행’이라는 천안함 침몰 조사결과에 대해 북측이 ‘검열단 파견’을 제의해 남북 간 접촉 여부가 주목됨. 북한 국방위원회는 20일 합동조사단이 천안함 침몰사태 조사결과를 발표하던 시간에 대변인 성명을 통해 ‘날조극’ 주장과 함께 “물증 확인을 위해 국방위 검열단을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북측은 국방위 성명발표와 비슷한 시각에 이번 주말에 검열단을 남측에 보내겠다는 전통문을 보내온 것으로 21일 확인됐음.
- 북측의 검열단 파견 제의는 전례가 없는 것으로 그동안 되풀이해 온 자신들의 ‘결백’을 주장하고 이를 통해 남측의 여론을 분열시키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임. 그러나 국방부는 21일 오후 유엔군사령부 특별조사팀이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여부를 규명하면 북한은 유엔사와의 장성급회담에 나올 것을 촉구하는 전통문을 북측에 보냈음. 사실상 북측의 검열단 파견 제의를 일축한 것임.
- 한국군 운영법 소장이 수석대표를 맡은 유엔사 군정위는 천안함 침몰사태와 관련, 특별조사팀을 만들어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예정임. 박정이 합동조사단 공동단장도 전날 검열단 파견 제의를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정전 관리를 위해 유엔사 정전위원회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북측이 어떻게 연루됐는지 정전위에서 판단하고, 이를 북측에 통보하고 조치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음.
- 북측은 1994년부터 정전위 체제를 무력화하고 판문점군사대표부를 설치해 그 기능을 대신하고 있고, 유엔사 측은 군사정전위와 장성급 군사회담, 이보다 한 단계 아래 기구인 대령급회담(비서장급) 등을 운용하며 북측과 대응하고 있음. 특히 북측도 검열단 파견이 불발되면 유엔사 채널을 통해 자신들의 혐의에 대한 ‘물타기’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음.
-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천안함 침몰사태와 관련, 유엔사와 북한군 간 장성급 군사회담이 열릴 가능성을 점치고 있음. 군정위는 천안함 침몰사태를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커 유엔사와 북한군 간 군사회담이 열리면 유엔사와 북측 간의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임.
- 2차 연평해전 직후인 2002년 8월6일에도 유엔사 측의 요구로 판문점에서 유엔사와 북한군 간 장성급 군사회담이 열렸고, 이 회담에서 양측은 연평해전과 같은 무력충돌 재발방지를 위해 문제를 대화로 풀어나가기로 합의했음. 이보다 앞서 발생한 1999년 1차 연평해전 이후에도 유엔사와 북한군 간 장성급 군사회담이 수차례 개최됐음.



- 유엔사가 북측에 회담을 제의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북측이 혹시라도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유엔사는 정전위 조사를 토대로 대북 성명을 발표하거나,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항의서한을 보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음.

● 한미, 대북 감시태세 ‘워치콘’ 격상 검토(5/21)

- 한미 군 당국은 21일 대북 감시태세인 ‘워치콘’(Watch Conditon)을 3단계에서 2단계로 한 단계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고위 관계자는 이날 “북한이 천안함 사태를 계기로 ‘벼랑끝 전술’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대북 감시태세인 ‘워치콘’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 군은 전날 김태영 국방장관이 주재한 전군 작전지휘관회의에서 워치콘 격상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하고 한미연합사령부와 이를 논의한 뒤 최종 결정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치콘은 북한의 군사활동을 추적하는 정보감시태세로 5단계로 구성되며, 단계가 높아질수록 정찰기 등 정보수집 수단과 감시횟수, 정보분석요원이 보강됨.
- 워치콘 ‘5’는 징후경보가 없는 일상적인 상황, ‘4’는 잠재적인 위협이 존재할 때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한 상황, ‘3’은 위협이 점증하고 있어 주의 깊은 감시가 필요한 상황임. ‘2’는 국익에 현저한 위협이 초래될 징후가 보일 때 발령되며 이때 첩보위성의 사진정찰, 정찰기 가동, 전자신호 정보수집 등 다양한 감시 및 정보분석활동이 강화됨.
- 한미연합사는 북한이 2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때도 ‘워치콘’을 격상했음. 한편 해군도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의 경계태세를 최고수준으로 끌어올렸음.

● 캠벨 “美, 천안함 항후조치 한국과 긴밀 협의”(5/20)

-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19일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 후 다음 단계 조치에 대해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캠벨 차관보는 내주로 예정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의 한국, 중국, 일본 방문과 관련해 브리핑을 갖고 “클린턴 장관의 아시아 방문 목적과 이유 중 하나는 (천안함 사고조사 발표 이후) 다음 단계에 관해 한국, 중국, 일본과 최상의 협의를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 캠벨 차관보는 미국 정부가 천안함 원인조사 과정의 모든 부문에 걸쳐 능동적이고 깊숙이 관여해 왔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미국은 (미국 동부시간으로) 오늘 저녁 발표될 조사결과를 강력하게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오바마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이 이미 전화 통화를 갖고 향후 공동 전략에 관해 대화를 나눴다”면서 “클린턴 장관이 방한하면 유명한 외교장관과 만나 협력 가능한 분야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고 말했다.
- 이어 캠벨 차관보는 오는 24일부터 이틀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미·중 경제전략 대화’에서 클린턴 장관과 다이빙귀 중국 국무위원이 만났을 때 천안함 조사결과에 대한 서로의 반응과 북한내부에서 돌아가는 상황에 대한 인식이 상호협회의 중심 화두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캠벨 차관보는 “우리는 북한이 2005년 핵무기를 포기하겠다고 약속한 (9.19) 성명을 지키리라고 여전히 믿고 있지만, 앞으로 매우 심각한 일련의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추후 천안함 침몰사고의 비극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스타인버그 “천안함 조사, 전문적이고 체계적”(5/20)

-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19일 천안함 침몰사고에 대한 조사는 “객관적이고도 체계적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천안함 침몰사고 원인조사 발표를 수 시간 앞두고 이날 워싱턴D.C.에서 미외교협회(CFR)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이번 조사는 선부른 결론을 내리거나, 결론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는 일을 피하면서 실제 (천안함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파악하려는 노력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천안함 조사결과를 사전에 통보받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수 시간 후면 한국이 발표하는데 내가 발표를 해서야 되겠느냐”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 이어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북한이 천안함의 배후로 지목될 경우 미국의 대응을 묻는 질문에도 “조사결과를 토대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겠다는 가정적인 상황에는 답하지 않겠다”고 전제하면서 “다만 우리(한국과 미국) 두 정부는 매우 긴밀하게 협력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우리 전문가들은 조사 시작 시점부터 관여해 왔으며, 미 해군은 이 분야에 많은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고 실제 이를 (한국 측에) 전달했다”면서 “비단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호주, 스웨덴도 조사에 매우 협조적이었고, 이는 이번 조사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 또 그는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어제 (전화) 대화를 나눴다”면서 “두 정상은 (지난달 워싱턴에서 열린)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만나는 등 긴밀한 접촉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한미 두 나라 사이의 전방위적인 대화와 협력은 이 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면서 “미국은 한국 정부가 취하고 있는 접근방식에 감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 美 “유엔 안보리 北 회부, 한국과 논의”(5/19)

- 미국은 18일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의 26일 방한 계획을 공식 발표하는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이 문제를 회부하려는 한국 정부의 입장에 사실상 지지 입장을 밝혔다.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클린턴 장관이 제2차 전략·경제



대화 참석차 중국을 방문한 뒤 26일 서울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음.

- 크롤리 차관보는 클린턴 장관이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만나 역내 안정 문제와 다른 이슈들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음. 클린턴 장관은 하룻밤을 자지 않고 당일치기로 서울을 방문할 것으로 전해졌으며, 중국 방문에 앞서 21일에는 도쿄도 방문함.
- 크롤리 차관보는 특히 20일로 예정된 우리 정부의 천안함 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 ‘이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느냐’는 연합뉴스의 질문에 “그 문제에 대해 한국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음.
- 이는 안보리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는 방식으로 안보리 회부 절차에 착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우리 정부의 입장을 사실상 지지하는 언급으로 풀이됨. 크롤리 차관보는 “(조사결과) 발표가 있으면, 우리는 한국 및 역내 다른 국가들과 조사 결과와 관련해 다음 조치들(next steps)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음. 그는 “(천안함 사건) 조사 자체 뿐만 아니라 조사에서 발견된 사실이 지역에 미칠 영향도 클린턴 장관이 한국 측 카운트파트들과 분명히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그는 이번 사건이 6자회담에 미칠 영향에 대한 질문에 “우리의 초점은 넓은 역내 안보문제에 명백히 맞춰져 있다”면서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봐 왔던 도발적 행동들은 역내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때때로 6자회담의 진전을 지연시켰다”고 말해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할 것임을 거듭 시사했음.
- 이와 관련, 그는 “한국이 조사에 대한 최종 결과들을 알려주면 그때 우리는 한국 및 다른 6자회담 참가국들과 (결과에 따른) 영향들을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면서 “도쿄와 서울에서 분명히 북한 문제가 논의될 것이며, 아마도 중국에서도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음.
- 크롤리 차관보는 “우리는 이번 조사 결과들에 명백히 좌우될 것”이라면서 “북한이 국제사회 및 역내 다른 국가들과 다른 관계를 갖길 원한다면 지난 수년간 우리가 봐왔던 도발적 행동들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중국, 일본, 한국과 천안함 조사 결과를 감안해서 논의를 할 것이며, 향후의 길을 공동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음.
- 그는 “북한이 도발적 행동들과 역내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공격 행동들을 중단하는 것이 역내 안보에 더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서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그들의 의무를 준수하고 긍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보고 싶다”고 밝혔음.
- 한편 클린턴 장관은 이날 오후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성 김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를 별도로 만나 천안함 조사 결과 및 향후 대북정책 방향 등에 대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 한·미, 천안함 대응조치 집중협의(5/19)

- 한·미 양국은 오는 26일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천안함 사태 조사결과에 따른 대응조치를 집중 협의할 방침이라고 외교 소식통이 19일 밝혔다.
- 양국은 특히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18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한국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방위공약을 재확인함에 따라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를 중심으로 한 군사동맹 강화방안이 가일층 구체화될지 여부가 주목됨.
- 양국은 또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여전히 신중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을 상대로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적극적인 '설득외교'를 전개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미·중 전략경제대화 참석차 24~25일 중국 베이징(北京)을 방문한 뒤 26일 오전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클린턴 장관은 방한직후 서울에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만나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천안함 사건의 후속 대응조치와 한·미동맹 발전방안을 중점 협의할 예정임.
- 양국은 이 자리에서 이번 사건이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향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와 양자적인 대응조치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자 대응조치로는 군사·금융·경제와 관련한 다양한 옵션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또 7월22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양국 외교·국방 장관 회담(2+2회의) 의제 등을 협의할 예정임.
- 이에 앞서 양국은 지난 14일 워싱턴에서 이용준 외교부 차관보와 장광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윌레스 그렉슨 국방부 아태담당 차관보가 참석하는 한·미 외교·국방 차관보급 '2+2 협의회'를 갖고 천안함 후속대응 조치를 포함한 양국 현안을 협의한 바 있음. 클린턴 장관은 중국 방문에 앞서 21일 일본을 방문해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일본 총리와 회담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 백악관 “오바마, 강력한 對韓방위공약 확인”(5/18)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저녁 이명박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한국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방위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백악관이 발표했다. 백악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 간의 전화통화 사실을 확인하면서 이같이 전했다.
- 백악관은 “두 정상은 이번(천안함) 사건의 완전한 진상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조사에서 나온 사실이 어느 쪽으로 귀결되든(그 조사결과에) 따르기로 약속했다”고 전했다. 백악관은 특히 “두 정상은 한국과 한국군, 한국 영토 및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최고의 노력을 약속했다”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가까운 친구이자 동맹국인 한국의 번영과 방어를 위한 미국의 강력하고 확고한 공



약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 또 “오바마 대통령과 이 대통령은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 폐기 약속을 준수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국제사회 의무를 준수하며, 이웃 국가들에 대한 적대적인 행위를 중단해야만 한다고 거듭 말했다”고 밝혔다.
- 이와 함께 이날 통화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협의를 위해 다음주 방한할 것이며, 양국의 외교·국방장관이 모두 참여하는 첫 ‘2+2회담’을 오는 7월 개최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백악관은 전했다. 백악관은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이 천안함 조사 진행상황을 설명했으며, 미국의 천안함 구조작전 지원 및 조사단 참여에 대해 사의를 표했다고 설명했다.

나. 한·중 관계

● 中전문가 “韓 천안함 대응 잘했다”(5/23)

- 중국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가 한국 정부가 천안함 사태에 대해 국제사회와 공조해 과학적이고 신중한 대응을 했다고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남북한에 대해 등거리 외교를 펼치고 있는 중국에서 이 기고문은 게재된 지 하루 만에 삭제돼 중국 정부가 천안함 사태에 대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짐작하게 함.
- 장렌구이 공산당 중앙당교 교수는 20일자 중국 신민망(新民網)에 올린 기고문에서 “한국 정부는 사건 발생 후 조사의 진전과 증거를 확보함에 따라 점진적으로 결론을 얻어냈다”면서 매우 신중하게 처리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장 교수는 “한국은 조사결과와 과학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민·군 합동조사를 하고 미국, 영국, 호주 등 각국 전문가가 공동으로 참여해 결론을 도출했다”면서 “이는 중대한 문제에서 소통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국제사회의 모델이 될 만하다”고 호평했다.
- 장 교수는 기고문에서 중국 측의 책임 있는 태도도 주문했다. 그는 “중국은 이 문제에서 어떤 한쪽을 일방적으로 편들어서도 안 되며 한쪽을 위해 죄가 없다고 변론해서도 안 된다”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자 책임 있는 대국인 중국은 국제사회와 함께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및 동아시아의 장기적인 평화·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또 “한국은 유사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외교, 경제, 군사적 강경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북한에 대한 무력 사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발표 직후 전쟁을 언급하며 반발한 북한에 대해서도 “전혀적인 전술이기는 하지만 실제 행동에 옮길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 장 교수는 “천안함 사건 발생은 한반도 비핵화가 파괴된 것과 상당한 관련이 있다”면서 “한반도 비핵화가 깨진 뒤에도 한반도의 평화



와 안정이 유지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이는 너무 선량한 염원(순진한 생각)일 뿐”이라는 말로 칼럼을 마무리했음.

- 천안함 사태에 대해 북한보다는 한국 쪽으로 기운 중국 전문가의 견해를 담은 이 기고문은 게재된 다음날인 21일부터 신민망을 비롯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삭제됐음. 베이징 외교 소식통은 “중국 정부가 한국으로부터 통보받은 조사결과를 자체적으로 평가·분석작업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나온 이 기고문 내용은 중국 정부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것일 수 있다”면서 “사이트에서 삭제된 것은 중국 정부가 천안함 사태를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음.

● 한·중 “2015년 교역 3천억 불 충실 이행”(5/23)

-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23일 한·일·중 통상장관회담 참석차 방한 중인 천더밍(陳德銘) 중국 상무부장과 양국 통상장관회담을 갖고 양국 간 통상현안에 대해 논의했음.
- 이날 회담에서 양측은 작년 10월 합의한 ‘한중 경제통상 협력비전 보고서’에서 합의한 대로 2015년 교역목표 3천억 달러 목표 달성을 위해 합의한 사항을 더욱 충실히 이행해 나가기로 했음. 보고서는 정보통신, 금융, 유통, 물류, 첨단기술, 에너지, 기후변화, 환경, 농업, 자동차, 조선업 등 23개 중점 협력분야를 선정하고 구체적인 정책방안도 담고 있음.
- 양국 장관은 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산관학 공동연구’를 종료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하고, 이를 오는 28일 양국 정상회의에 보고하기로 했음. 이어 양측은 지난 2008년 12월 한국어 시험에 합격한 중국 노동인력의 방문 취업이 도입되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하며 향후 새로운 협력분야로 농산품 유통표준화, 폐차 및 폐가전 재활용 분야 등을 선정하고 협력을 지원키로 했음.

● “中, 남북에 등거리 외교 펼쳐야” <중학자>(5/20)

- 중국이 남북한을 상대로 등거리 외교 전략을 써야 한다는 중국의 외교 전문가의 주장이 제기됐음. 중국 외교부 직속의 중국국제문제연구소 진린보(晋林波) 연구원은 18일자 환구시보(環球時報) 기고문에서 “중국 정부가 남북한과의 관계를 동시에 유지하고 중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중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등거리 외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등거리 외교 전략은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북한의 소행 쪽으로 굳어지는 천안함 사태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됨.
- 진 연구원은 “남북과 동시에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중국 입장에서 정치적 난제이자 외교적 시험대이기 때문에 중국은 장기적이고 성숙하고 유효한 전방위적 한반도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음.



- 그러면서 그는 새로운 전략 수립의 요소로 ▲한·중, 북·중 관계를 동시에 증진시키는데 유리한지 ▲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안정·번영에 유리한지 ▲ 중국의 장기적 이익을 설정하고 지키는데 유리한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 진 연구원은 천안함 사건 조사결과와 관련, “한국은 ‘옳은 것이 옳다’고 중국이 말하길 바라지만 북한은 이미 천안함과 무관하다고 발표한 상태”라고 전제하고 “한국의 조사 결과가 발표되면 북한은 한 번 더 반박할 것이고 중국 입장에서는 남북이 서로 주장하는 근거를 갖고 스스로 판단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그는 결론적으로 “중국이 어떤 상황에서도 남북한에 대해 (기계적인) 등거리 외교를 유지하기는 어렵지만 새로운 전략 수립에 관한 3가지 요소를 기초로 유연하게 외교전략을 펴야 한반도에서의 건설적인 역할을 지속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다. 한·일 관계

● “日, 한국에 독도 지질조사 중단 요청”(5/17)

- 오카다 가쓰야(岡田 克也) 일본 외무대신이 지난 16일 경주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지질조사를 비롯한 한국 측의 독도 관련 활동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17일 확인됐음.
- 외교 소식통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카다 외상이 독도에 대한 자국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유 장관에게 독도와 관련한 활동을 억제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구체적으로 독도 주변 해역에서의 지질조사를 언급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오카다 외상은 아울러 ‘이 문제가 한·일 양국관계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 유 장관은 이에 대해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히 우리 고유의 영토’라는 정부의 입장을 비교적 상세히 설명하면서 독도나 과거사 문제가 양국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 김영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독도에 대한) 우리의 엄중한 입장을 일본 측에 충분히 설명했다”며 “양국 장관은 독도 문제로 인해 새로운 한일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자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 이와 관련, 일본의 일부 언론은 오카다 외상이 독도 관련 활동 자제 요청을 한 데 대해 유 장관이 “한·일 관계에 악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동의 의사를 표했다고 보도했음. 외교부 당국자는 “사실 관계를 왜곡한 보도”라며 “유 장관은 우리 정부의 독도 관련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고, 새로운 100년을 위해 양국 관계 발전에 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자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다.



- 한편, 한국해양연구원 동해연구소는 지난달 16일부터 최근까지 독도 주변 해역에서 지질조사를 시행했음.

라. 미·중 관계

● “클린턴, 천안함 사건 中협조 강력 얘기할 것”(5/23)

- 중국을 방문 중인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 측에 천안함 사건의 심각성과 공동대응의 중요성을 강력히 얘기할 것이라고 주요 외신들이 클린턴 장관을 수행중인 미 고위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이 고위 당국자는 상하이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클린턴 장관이 왜 이번 (천안함) 사건이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이며, 왜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강력한 협조를 얻으려고 하는지에 대해 강하게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 그는 “우리는 그들(중국)이 일어난 일에 대한 현실을 인정하고, 한국과 미국, 일본이 북한의 행동을 변화시키는데 도움을 줄 대응을 만드는 데 동참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 한편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클린턴 장관을 수행중인 미 당국자들은 한국이 대북 군사적 대응은 고려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 고위 당국자는 “한국이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들은 이런 위협을 낳을 조치들은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이 천안함 사건을 일으킨 것이 “전쟁으로 가기 위한 첫 조치”라는 증거를 본 적이 없다면서 “이번 사건이 일회성 행위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美·中전략경제대화, 천안함 사태 속 내일 개막(5/23)

- 주요 2개국(G2)으로 불리는 미국과 중국의 제2차 전략경제대화가 중국 베이징에서 24~25일 이틀간의 일정에 돌입함. 한국의 천안함이 북한 어뢰의 공격으로 침몰했다는 발표 직후 열리는 이번 회의는 미·중 양국이 천안함 사태에 대해 어떻게 향후 대응 방안을 조율할 것인지를 놓고 국제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이번 회의는 크게 전략대화과 경제대화 등 2가지 축으로 나뉘어 진행됨. 미국 고위당국자에 따르면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전략대화의 중국 측 상대인 다이빙궈(戴秉國) 국무위원에게 천안함 사태의 심각성과 양국간 공동 대응의 중요성을 강력하게 제기하면서 중국에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할 것으로 보임.
- 이에 따라 그동안 냉정과 절제를 요구하면서 추가적인 상황 악화 방지에 주력해 온 중국이 이번 회의에서 어떤 구체적인 태도를 보일지가 주목됨. 앞서 21일 상하이(上海)에 먼저 도착한 클린턴 장관은 22일 저녁 베이징으로 자리를 옮긴 뒤 23일 중국 지도부를 예방, 천안함 사태의 심각성과 국제사회의 공조 필요성 등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 미국과 중국은 이번 회의에서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북핵 6자회담 재개 문제도 논의하겠지만 우선순위에서 친안함 사태에 밀릴 공산이 커 보임. 양국은 전략대화에서 중동 문제 및 이란 핵, 테러 대응, 기후변화 등 국제적 현안을 논의하고 올해 초 각종 민감한 이슈로 중단된 군사교류 복원 등도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할 예정임.
- 양국은 이 회의의 또 다른 축인 경제대화에서는 위안화 환율 문제와 양국의 무역분쟁 등을 주로 논의할 전망이다. 왕치산(王岐山) 중국 부총리와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이 공동 의장을 맡은 경제대화는 상무부와, 재무부, 무역대표부, 중앙은행 등 양국 경제·무역 관련 부처와 기관이 총망라돼 경제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함.
- 이 회의에서 미국은 위안화 절상 압력을 제기하고 중국은 스스로 결정할 문제라며 맞설 것으로 보이며, 지난해 말 이후 첨예하게 불거진 무역 갈등해소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됨. 그밖에도 양국은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거시경제 정책 공조방안과 유럽 채무위기에 대한 대응방안 등도 협의할 예정임.
- 양국 40여개 부처에서 책임자급 인사만 50여명이 참석하는 이 회의는 미국에서만 200명 등 총 500여명에 육박하는 양국 인사들이 참가할 예정이어서 지난해 1차 회의보다 규모가 대폭 늘어났음. 이 회의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의 합의에 따라 기존의 전략 대화와 전략경제대화를 통합한 것으로 지난해 7월 미국 워싱턴에서 처음 열렸음.

● 中, 美 불법복제 단속실패국가 지목에 반발(5/23)

- 미국 의원들이 저작물의 불법복제 단속에 실패한 국가로 중국을 지목한 데 대해 중국이 강력히 반발했음. 마자오쉬(馬朝旭)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외교부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을 통해 “미국 국회의 일부 의원들은 사실 관계를 존중하고 중국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음.
- 마 대변인은 “중국 정부는 지적재산권 보호업무를 매우 중시하며 지적재산권 확립을 국가전략으로 삼아 지적재산권 보호 시스템 건설에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면서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우리의 정책과 실제 행동에서 성과가 있었음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라고 주장했음. 중국 정부의 이번 반응은 미국 의회 의원들이 최근 중국과 캐나다, 멕시코, 러시아, 스페인을 영화, 음악, 비디오게임 등의 불법 복제를 단속하는 데 실패한 5대 국가로 지목한 데 따른 것임.
- 미국 상·하원 소속 의원 70명으로 구성된 초당파 그룹인 ‘미 의회 국제 저작권보호 코커스’는 이들 5개국이 지난해에 이어 2년째 국제 저작권 감시 리스트의 수위를 지켰다며 이들 국가에서의 지적재산권 절도 행각은 침해는 “놀랄만한 수준”이라고 주장한 바 있음.



● <클린턴 방중 ‘천안함 논의’ 관심 집중>(5/22)

-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이 21일 밤 전용기편으로 중국 상하이(上海)에 도착해 공식방문 일정에 들어간 가운데 미·중 간 천안함 침몰사건 논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24~25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미·중 전략경제대화 참석차 방중한 클린턴 장관은 22일 상하이 엑스포 현장을 둘러보고 나서 이날 오후 베이징으로 향함. 클린턴 장관은 본격적인 회담에 앞서 이틀 동안 중국 수뇌부를 예방하고 외교안보라인과 잇따라 회동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자리에서 천안함 사건에 대한 미·중 양국 간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관측됨.
- 클린턴 장관은 방중 직전 방일에서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외상과의 회담 후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의 천안함 공격 행위에 일상적으로 대응할 수는 없으며, 지역적(regional) 차원만이 아니라 국제적(international) 대응이 반드시 취해져야 한다”면서 대북 제재의 목소리를 높였으며 중국과도 대응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대북제재의 여론조성을 위해서는 중국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임. 따라서 클린턴 장관은 카운터 파트인 다이빙귀 국무위원에게 중국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할 것으로 보임.
- 현재 미 행정부는 구체적인 대북제재 방법을 제시하지는 않으나 이번 회담에서 중국의 의도를 확인한 후 입장을 공표할 것으로 관측됨. 이 때문에 클린턴 장관은 방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도발 행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며, 국제사회는 한국에 대한 공격 행위에 대담하지 않고 지나칠 수는 없다”고 말하면서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 방안에 대한 언급은 피했음. 천안함 사건을 안보리에 회부한다고 해도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미온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을 염두에 둔 태도로 보임.
- 그러나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클린턴 장관은 북한에 대한 물리적 대응은 피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외교적 응징수단인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이 채택되도록 중국의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보고 있음. 따라서 중국이 향후 어떤 태도를 보일지 국제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음. 지금까지 중국은 냉정과 절제를 요구하면서 추가적인 상황 악화 방지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여 왔음.
- 우리 정부가 민·군 합동조사단을 통해 지난 20일 북한의 어뢰공격으로 천안함이 침몰됐다고 공식 발표하자 같은 날 오후 마자오쉬(馬朝旭)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각국은 냉정하고 절제된 태도로 유관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해 한반도 정세의 긴장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한데서도 그런 분위기가 읽힘.
- 중국은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제공한 천안함 조사결과에 대한 검증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음. 자체적으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낸 후 입장을 내리겠다는 의지를 비친 것임. 베이징의 한 외교소식통은



“미·중 전략경제대화에서 중국 측은 남북한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만큼 제대로 따져보고 입장을 정하겠다는 신중론을 펼 것”이라고 예상했음.

- 일각에서는 중국이 미국에 천안함 조사결과와 관련해 검열단을 보내겠다고 한 북한의 발언을 거론하면서 북한을 포함한 합동조사를 제의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음. 중국 내 여론은 북한을 지목한 국제합동조사단의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 후에도 누구의 소행인지 ‘확실한’ 증거는 없는 것 같다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음.
- 북한은 천안함 사건 조사결과 발표 당일에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에서 ‘날조극’이라며 검열단 파견을 통보한 데 이어 이날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명의로 제재가 실행되면 남북관계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발표하는가 하면 미국의 대북제재 지지 입장을 비난하고 나서는 등 대응 강도를 높여 중국을 간접적으로 압박하고 있음.
- 이와는 달리 한국과 일본은 물론 미국까지 나서 전방위적으로 대북 제재를 압박할 경우 중국이 큰 부담을 느껴 입장변화를 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음. 주평(朱鋒)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모든 증거가 북한의 도발을 의미한다면 중국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면서 “중국으로선 북한을 바라보는 관점을 재고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유엔 안보리가 대북제재를 부과하려고 (한국의) 조사결과를 검토한다면 내 생각에 중국도 지지할 것 같다”고 말했다.
- 베이징의 다른 외교소식통은 “중국이 안보리에서 적극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기보다는 제재의 수준을 낮추는 데 주력하거나 기권하는 방법으로 소극적인 대응을 할 수도 있다”고 점쳤음.

● 美 언론 “中 선택 직면”(5/21)

- 미국 언론들은 20일 북한의 공격으로 발표된 천안함 조사결과에 대한 분석 기사를 통해 향후 대북 제재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중국 변수를 중점적으로 조망했음.
- 뉴욕 타임스(NYT)는 한국 정부의 유엔 안보리 회부 추진과 미국의 강력한 지원 입장을 전하면서 “관건은 북한의 맹방이자 안보리 거부권을 가진 중국이 국제사회의 대북 규탄 대열에 동참하느냐는 것”이라고 지적했음. NYT는 “중국은 지난해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대북제재 조치를 지지했지만, 이번 천안함 침몰 이후에는 수 주 동안 북한을 배후로 지목하는데 대해 극도로 신중한 태도를 취해왔다”고 중국의 태도를 설명했다.
- 하지만 NYT는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를 인용, “중국은 항상 남·북한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것을 꺼리는 태도를 보여 왔지만, 이번 사건은 그런 태도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에는 중국이 선택을 해야만 한다”고 보도했음.
- 24, 25일 베이징에서 예정된 미·중 전략·경제대화에서도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천안함 대응은 물론 중국의 전반적인 대북정책



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NYT는 내다봤음. 워싱턴 포스트(WP)는 한국 정부가 천안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를 추진하기 위해 적극 움직일 것이라면서 문제는 “국제사회의 일치된 노력이 작동하느냐”라고 지적했음. 특히 한국 내에서는 천안함 사건 이후 중국의 대응에 대해 못마땅해 하며 분위기가 ‘격양’(irritation)돼 있는 상태라고 전하면서도, 한국의 대북 제재가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는 중국의 안보리 거부권 행사 여부에 달려 있다고 분석했음.

- 시사주간 타임도 이날 인터넷판에서 “천안함을 공격한 북한에 대한 제재의 관건은 중국이 동참하느냐 여부에 달려있다”고 분석하면서 중국이 동참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전망했음. 타임은 현재 이 사건을 유엔 안보리에 회부해 새로운 제재를 가하려는 한국 정부의 노력을 지지하는 방안 외에 미국정부가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을 다시 하는 방안과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가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음.
- 특히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 자금 동결 등 국제사회의 대북 금융제재는 워싱턴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제재수단이 될 수 있다는 지적임.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금융제재에 반발해 지난 2006년 가을 1차 핵실험을 감행했다고 보고 있으며, 세종연구소 정성장 연구원은 북한이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금융제재를 재차 가할 경우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감행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음.
- 타임은 특히 북한이 대외무역의 3분의 1이 대중무역일 정도로 중국이 북한경제의 생명줄 역할을 하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유일한 지렛대는 중국이 쥐고 있다고 분석한 뒤 중국의 결단 없이는 김정일을 굴복시킬 수 없으나, 중국이 결단을 내릴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지적했음.

● 美·中 전략경제대화 규모 대폭 늘려(5/21)

- 오는 24~25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제2차 미·중 전략경제대화가 이전보다 규모를 대폭 늘려 치러짐. 미국은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을 공동 대표로 한 회의 대표단 200여명을 중국에 파견할 예정임. 회의 개최국인 중국은 미국보다 더 많은 인원을 참가시킬 예정이어서 이번 회의는 작년 미국에서 열렸던 1차 회의 때보다 규모가 크게 늘어나게 됨.
- 홍콩 대공보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의 커트 캠벨 동아태 차관보는 19일 브리핑에서 “미국 정부의 모든 부처와 미군 태평양사령부를 포함한 군부 책임자 등 200여명의 대표단이 이번 회의에 참가한다”고 말했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특별대표인 클린턴 장관과 가이트너 장관을 포함해 장관급 인사만 해도 15~18명이 참가한다고 그는 덧붙였음.
- 중국 역시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의 특별대표인 왕치산(王岐



山) 부총리와 다이빙궈(戴秉國) 국무위원을 포함해 200여명에 달하는 미국 대표단보다 많은 인원을 참가시킬 예정임. 주광야오(朱光耀) 중국 재정부 부장조리(차관보)는 20일 전략경제대화 관련 기자회견에서 “중국에서 열리는 회의인 만큼 중국 대표단은 미국보다 더 큰 규모가 될 것”이라고 말했음. 추이텐카이(崔天凱) 중국 외교부 부부장도 이 회견에서 “양국 40여개 부처가 이 회의에 참가하며 책임자급만 50여명에 이른다”고 말했음.

- 이번 회의는 천안함 사고 원인 발표 직후 열리는 것이어서 미·중 양자 간 현안 외에도 천안함 사태에 대한 미·중 양국의 대응방안을 비롯해 6자회담 재개 문제 등 동북아시아의 현안이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됨. 이 회의는 오바마 대통령과 후 주석의 합의에 따라 기존의 전략대화와 전략경제대화를 통합한 것으로 지난해 7월 미국 워싱턴에서 처음 열렸음.

● <긴급진단:천안함> 가파른 美·中 대치전선(5/20)

- 합동조사단의 20일 천안함 사건 조사결과 발표를 계기로 미·중 간의 대치전선이 선명히 드러나고 있음.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무력도발이라는 우리 정부의 최종 결론이 나오자 미국은 즉각 전폭적 지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선 반면 중국은 ‘냉정과 절제’를 강조하며 여전히 신중론으로 대응하는 기류이기 때문임. 양국의 엇갈린 반응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를 중심으로 한 우리 정부의 외교적 대응이 가시화되면서 가일층 첨예한 대립구도를 형성해낼 가능성이 높음.
- 대북 강경으로 기운 워싱턴의 기류는 19일(현지시간) 로버트 김스 대변인 명의로 나온 백악관 성명이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백악관은 “이번 공격은 북한의 용납할 수 없는 행위와 국제법 위반의 또 하나의 예”라면서 “이번 공격은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도전이자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비난했음.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이런 입장표명은 한·미간의 인식과 접근방식이 공통선상에 놓여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음.
- 객관적 증거로 드러난 북한의 군사도발은 동맹국에 대한 중대한 안보위협이라는 인식 속에서 그에 상응하는 단호한 대응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분석임. 이에 따라 ‘선(先) 천안함, 후(後) 6자회담’으로 특징지어진 한·미의 공동 대응기조는 견고한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향후 외교적 대응과정에서 중국을 설득 또는 압박하는 한·미 공조 스탠스도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이에 반해 중국의 반응은 여전히 신중기조임. ‘적절한 처리’라는 전략적으로 모호한 표현을 되풀이했지만 정작 천안함 사건을 일으킨 북한을 비판하거나 한국 정부를 지지한다는 언급은 등장하지 않고 있음. 중국 마자오쉬(馬朝旭)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각국은 냉정하고 절제된 태도로 유관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해 한반도 정세의 긴장



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고, 추이텐카이(崔天凱) 중국 외교부 부부장도 기자회견에서 “천안함 사건을 적절히 처리하는 것과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것이 각국 인민의 공통된 열망이며 유관 당사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 이는 결정적 물증이 나오기 이전인 15일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와 17일 장신선 주한 중국대사의 민주당 지도부 면담에서 드러난 발언의 흐름과 같은 선상에 놓여있음. 추이 부부장은 특히 북핵 6자회담을 언급하며 “중국은 유관 당사국들이 공동노력해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며, 마 대변인은 “중국은 일관되게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6자회담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언급했음. 천안함 사건과는 별개로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하자는 기존의 입장을 그대로 재확인한 셈임.
- 한반도 안정과 관리를 중시하는 중국 외교의 기본 기조를 반영하고 있으며, 천안함 사건이 동북아 역내의 긴장과 갈등을 고조시키지 않도록 관리하려는 전략적 의도가 깔려있다는 분석임. 이런 맥락에서 중국은 이번 사건이 유엔 안보리 무대에 오르더라도 소극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높음. 특히 외교가에서는 중국이 지난 1996년 강릉 잠수함 침투사건이 안보리에서 논의될 당시 신중론을 내세운 ‘물타기’를 시도해 실효성 없는 안보리 의장성명을 유도했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음.
- 따라서 미·중 양강은 유엔 안보리를 무대로 천안함을 놓고 첨예한 외교적 대치전선을 그려낼 가능성이 높아 보임. 특히 남·북한 간에 공방전이 불붙고 미·중이 이에 가세하는 흐름이 조성되면 ‘한·미’ 대 ‘북·중’의 대립축이 형성될 가능성이 적지 않음.
- 당장 오는 24~25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미·중 전략경제대회는 천안함을 둘러싼 미·중간의 입장차가 표면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됨. 그러나 미·중의 ‘천안함 대치’가 양국 간의 전면적 갈등구도로 발전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외교가의 분석임.
- 천안함 사건이 당장 뜨거운 이슈로 떠올라있지만 동북아 역내질서를 주도하는 양강인 미·중 사이에는 천안함 못지않은 다양한 현안 아이템들과 정책적 우선순위가 존재하는 게 현실이기 때문임. 미·중 상호간의 갈등·협력 흐름을 활용해 천안함 사건의 단호한 대응조치를 조속히 이끌어내면서도 미·중간의 전략적 이해 조정 흐름을 놓치지 않는 주도면밀한 외교력이 요구된다는 게 외교가의 지적임.

마. 미·일 관계

● <美日 냉기류 여전.. 클린턴 4시간 체재>(5/22)

- 오키나와(沖縄)현의 후텐마(普天間) 기지 이전을 둘러싸고 형성된 미국과 일본의 냉기류가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의 방일에서 다시 확인됐음. 아사히신문은 22일, 클린턴 국무장관이 일본에서는 거



- 우 4시간 체재했다고 전했다.
- 클린턴 장관은 일본에 잠시 머물면서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와 20분, 오카다 가쓰야 외상과 1시간 정도 회담했음. 클린턴 장관은 오카다 외상과의 기자회견에서 거듭 미일 동맹과 일본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이는 일본을 ‘배려’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 위한 연출일 뿐 후텐마 문제에서 불거진 ‘거리’는 여전한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일본으로서는 후텐마 문제가 발등에 떨어진 불이지만 클린턴 장관의 이번 방일 목적은 후텐마가 아니라 천안함을 어뢰로 공격해 침몰시킨 북한을 제재하기 위한 공동 전선 구축 차원임. 요미우리신문은 클린턴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이번 방일은 한국 초계함 침몰 사건 해결에 일본 측이 협력할 결의가 있는지를 재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했음.
 - 신문에 따르면 미국 정부 일각에서는 하토야마 총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대북 제재에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중국을 의식해 한국, 미국과 다른 입장을 보일 가능성을 우려함. 하토야마 총리와 오카다 외상은 천안함 문제와 관련 한·미와 같은 입장으로, 긴밀히 협력하면서 공동 보조를 취하겠다고 약속해 클린턴 장관을 안심시켰음.
 - 후텐마 문제에 대해 클린턴 장관은 “일본 정부가 발표한 기한(5월 말)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문제해결을 기대하고 있다”고 긍정적 반응을 보였음. 하토야마 정부가 입장을 선화해 기존 미일 합의안에 근접한 안을 내놓고 있는 것을 평가한다는 의미임.
 - 일본 정부는 후텐마 기지의 오키나와 밖 이전을 강력히 추진했으나 해당 지역주민과 미국의 반발로 여의치 않자 최근 입장을 바꿔 미일이 기존에 합의한 나고(名護)시 헤노코(邊野古)로 이전하되 훈련의 일부만 가고시마(鹿兒島)현 도쿠노시마(徳之島)로 옮기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미국과 일본은 내주 중 공동성명 형식으로 후텐마 이전 문제의 해결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갈등 봉합에 나서면서, 한국과 함께 천안함을 침몰시킨 북한의 도발을 응징하기 위한 행동을 개시할 것으로 보임.
 - 하지만 미국 정부의 하토야마 총리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이 향후 진행될 후텐마 이전문제 해결을 위한 세부 협상과 천안함 문제에 대한 공조를 통해 해소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함.
- “美·日 후텐마 기존안 미조정 공동성명” <아사히>(5/20)
-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沖繩) 주둔 주일 미군 후텐마(普天間)비행장 이전 문제와 관련, 기존 합의안을 미조정하는 선에서 미국과 합의한 뒤 이달 중 공동성명을 발표할 것이라고 아사히(朝日)신문이 20일 보도했음.
 - 이 신문에 따르면 두 나라 외무장관과 국방장관(2+2)의 합의 형식으로 발표될 공동성명에는 후텐마 기지의 이전지를 2006년 양국이 합



의했던 같은 오키나와현 내 나고(名護)시 헤노코(邊野古)로 명기하기로 했음. 또 활주로도 안전성을 고려해 일본 정부가 추진해 온 바다에 말뚝을 박아 건설하는 잔교방식이 아닌 바다를 메워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음. 구체적인 공법은 공동성명에서 언급하지 않을 예정이지만 기존 합의안인 활주로 2개를 1개로 하고, 건설 장소도 기존안에 비해 수십m 정도 바다 쪽으로 옮기는 미세조정이 될 전망이다.

- 오키나와 주둔 미 해병대 훈련의 일부를 오키나와현 밖으로 이전한다는 내용은 공동성명에 담되 일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가고시마(鹿兒島)현 도쿠노시마(徳之島)는 명기하지 않기로 했음. 현지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성사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임.
- 공동성명에서는 미 해병대를 비롯한 오키나와 주둔 미군의 역지력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한편 기존 합의안에 들어있는 오키나와 주둔 해병대 8천600명과 가족을 괄으로 이전하는 방침을 재확인하기로 했음. 결국 일본과 미국이 2006년 합의한 안에 비해 해병대 훈련 일부를 오키나와현 밖으로 이전한다는 내용을 빼면 차이가 거의 없는 셈임.
- 이는 하토야마 총리가 밝힌 '최소한 오키나와현 외 이전'과는 거리가 멀. 바다를 매립해 활주로를 만들도록 한 기존안을 '자연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으나 바다를 메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임. 일본 정부가 기존 합의안을 미조정하는 선에서 미국과 이달 중 공동성명 발표를 서두르는 것은 하토야마 총리가 국민에게 약속한 '5월말 결론' 시한에 쫓긴데다, 기존 합의안 준수를 요구하는 미국의 입장을 존중해 경직된 미일 동맹관계를 복원하자는 의도로 보임. 하지만 오키나와의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이 후텐마 기지를 오키나와현 밖으로 이전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다 도쿠노시마는 후텐마의 일부 훈련을 수용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어 일본과 미국이 공동성명에 담을 이전안이 관철될지 여부는 불투명함.

바. 미·러 관계

● “START, 미사일 방어망에 영향 없어”(5/19)

- 지난 4월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 간에 조인된 새로운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 전력에는 아무런 제약도 가하지 않고 있다고 미 각료들이 18일 말했다.
-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은 이날 START 비준과 관련된 상원 청문회에서 새로운 감축협정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을 저해할 것이라는 공화당 측의 비판에 대해 “조약의 어느 조항도 우리의 미사일 방어 노력을 제약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클린턴 장관은 “미국은 미사일 방어에 반대하는 러시아 측 입장



에 제약받지 않을 것이며 자체 미사일 방어망을 계속해서 개선, 배치 하겠다는 방침을 이미 (러시아 측에) 천명한 바 있다”고 거듭 강조 했음.

- 그러나 공화당의 밥 크로커 상원의원은 러시아 측이 조약의 미사일 방어망 적용 여부에 대해 ‘매우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회의론을 표명하면서 “미사일 방어망과 관련해 시작도 하기 전에 협상 쌍방이 서로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은 당혹스러운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음. 러시아 측은 그동안 조약의 미사일 방어망 적용 여부에 대해 만약 미국이 러시아가 반대하는 방향으로 미사일 방어망 구축을 강행할 경우 조약에서 탈퇴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주장해왔음.
- 이에 대해 게이츠 국방장관은 러시아가 줄곧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 구축에 반대해온 사실을 지적하면서 러시아 측의 반대는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일축했음. 게이츠 장관은 러시아가 지난 1969년 전략무기감축협상을 시작할 때부터 (미사일 방어망을) 반대해 왔다면서 “우리는 (미사일 방어망 구축이) 가능한 반면 그들은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음.
- 미국은 2011년도 예산에 미사일 방어망 구축을 위한 199억 달러를 계상하고 있음. 새로운 START는 미국과 러시아 양국이 각각 1천 550개의 핵탄두를 감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미 상원의 비준 과정에서 야당인 공화당의 반대에 직면하고 있음.

사. 기 타

● 한·일·중, 올해 안 3국 투자협정협상 타결-3(5/23)

- 지역 및 글로벌 현안과 관련, 대표들은 세계무역기구(WTO)의 개방적이고 공정한 다자간 무역체제에 대한 지지를 표한 뒤 원대하고 균형적인 DDA(도하개발어젠다)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다짐했음.
- 또 아태경제협력체(APEC)의 2010 의제인 지역경제통합, 신성장전략, 인간안보의 3요소에 관한 논의를 심화시켜 2010년 이후에 새로운 APEC 비전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음.
- 이어 대표들은 3국 기업들이 제3국 시장에서 광범위한 협력을 추진하기로 하고 ‘엔지니어링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을 창설한 것을 환영한 뒤 3국 물류유통보고서를 지속 편찬해 유통물류분야에서도 실질적 협력을 모색해 나갈 것을 제안했음.
- 아울러 대표들은 3국 간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3국 통상장관회담의 별도 개최를 정례화하기로 했음. 이날 회의에 앞서 김 본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3국 간 통상장관 회담의 내실화를 위해 이번에 처음으로 다른 국제회의와 별도로 회담을 개최하게 됐다”며 “생산적·효율적 논의를 통해 성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중국 대표인 천 부장은 “아시아가 세계경제 회복을 견인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런 추세는 계속돼야 한다”면서 “유럽 재정위기, 미국의 경제위기, 보호무역주의 등 글로벌 차원의 문제가 여전히 많은 만큼 3국 간 경제협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 일본 측 나오시마 경제산업상도 “3국의 국내총생산(GDP)이 10조 달러를 넘는 등 아시아 경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면서 “3국의 발전이 아시아 및 세계 발전에 중요하다”며 3국 간 협력의 중요성을 역설했음. 한편, 이번 3국 회담을 계기로 한·중, 한·일 통상장관회담도 병행 개최돼 양자 간 현안 및 관심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음.

● 한·일·중, 올해 안 3국 투자협정협상 타결-2(5/23)

- 이날 회담에 한국 측에서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일본 측에선 나오시마 마사유키 경제산업상이, 중국 측에선 천더밍 상무부장이 각각 대표로 참석했음.
- 3국 대표들은 발표문에서 3국 투자협정 협상에서 이뤄진 긍정적 진전에 주목한다면서 “2010년 내에 가능한 한 조속히 3국 간 투자협정 협상의 타결을 위해 수개월 내에 실질적 합의를 달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데 의견을 함께 한다”고 밝혔다.
- 3국 투자협정 협상은 지난 2007년 1월 3국 정상회담에서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협력 수준을 높이기 위해 합의된 것으로, ▲국가 간 투자여건 개선 및 투자확대 ▲ 투자기업의 보호에 대한 문제 등을 담게 됨.
- 3국 대표들은 또 이달 초 서울에서 1차 회의를 가진 3국 FTA 산관학 공동연구의 성공적인 출범을 환영한 뒤 2012년까지, 가급적 2012년 정상회의 이전에 공동연구를 종료하도록 노력하기로 하고, “상호호혜적인 3국 간 경제교류가 장기적으로 지역경제통합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더욱 발전되기를 바란다”는데 합의했음.
- 이와 함께 3국 대표들은 오는 6월 G20 토론토 정상회의 및 11월 서울 정상회의 사전준비단계에서 긴밀히 협력을 지속해 나가고 G20 활동에서 개도국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음. 대표들은 또 ‘개발’을 서울 정상회의 핵심의제로 선정한 한국의 이니셔티브에 대해 긴밀히 조율해 나가기로 했음.

● 한·일·중, 올해 안 3국 투자협정협상 타결(5/23)

- 한국과 일본, 중국 등 3국은 3국 간 경제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올해 안에 가능한 한 조속히 3국 간 투자협정 협상을 타결짓기로 했음. 3국은 또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기 위한 정부·산업계·학계 대표들의 공동연구를 2012년까지, 가급적 2012년 3국 정상회담 이전에 종료키로 했음. 3국은 이날 서울에서 제7차 한·일·중 통상장관회담을 열어 이같이 합의하고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이를 공개적으로 밝혔음.
- 이날 회담에 한국 측에서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일본 측에선



나오시마 마사유키 경제산업상이, 중국 측에선 천더밍 상무부장이 각각 대표로 참석했음.

- 3국 대표들은 발표문에서 3국 투자협정 협상에서 이뤄진 긍정적 진전에 주목한다면서 “2010년 내에 가능한 한 조속히 3국 간 투자협정 협상의 타결을 위해 수개월 내에 실질적 합의를 달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데 의견을 함께 한다”고 밝혔음.
- 지역 및 글로벌 현안과 관련, 대표들은 세계무역기구(WTO)의 개방적이고 공정한 다자간 무역체제에 대한 지지를 표한 뒤 원대하고 균형적인 DDA(도하개발어젠다)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다짐했음. 또 아태경제협력체(APEC)의 2010 의제인 지역경제통합, 신성장전략, 인간안보의 3요소에 관한 논의를 심화시켜 2010년 이후에 새로운 APEC 비전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음.

● 韓·러, 전력-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5/23)

- 러시아의 전력망 현대화 사업에 우리 기업의 참여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또 시베리아산 천연가스 도입 문제를 다룰 양국 정부 차원의 협의채널이 구성될 것으로 보임.
-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과 세르게이 슈마트코 러시아 에너지부 장관은 21일 모스크바에서 에너지장관 회담을 열고 이 같은 공동의사록에 서명했다고 지경부가 23일 밝혔음.
- 러시아는 현재 폐쇄 대상 설비가 전체 전력망의 30% 이상이나 되는 등 전력시설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으로, 2030년까지 총 50억~70억 달러를 전력망 현대화 사업에 투입할 계획임. 이번 합의에 따라 양국은 러시아 전력망에 대한 진단과 에너지효율 향상 사업 및 스마트그리드(지능형 전력망) 등 전력분야 전반에 걸쳐 협력관계를 확대하게 됨.
- 특히 러시아는 전력망 현대화 사업과 관련한 세부 정보를 한국 측에 제공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임. 양측은 한국 업체에 인정할 구체적인 인센티브를 논의하기 위한 ‘서브위킹그룹’(실무소위원회) 회의를 오는 7월 개최할 예정임.
- 양측은 또 북한을 경유하는 파이프라인 방식(PNG)을 포함한 시베리아산 천연가스의 한국 도입 문제와 관련, 공동 타당성 조사가 원만히 종료됐음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정부 차원의 별도 협의채널을 구성하기로 합의했음. 이와 함께 러시아가 제3국에서 유전이나 가스전을 개발하는 경우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음.
-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러시아 희유금속산업연구소는 이번에 희유금속 선광·제련기술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음. 한편, 양국은 21일 모스크바에서 수교 20주년을 기념하는 산업기술협력 고도화 포럼과 경제협력 확대 포럼을 잇따라 열어 산업·기술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했음.



● 원자바오 총리, 한·일 등 4개국 순방(5/22)

-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가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한국과 일본, 몽골, 미얀마 등 아시아 4개국 순방에 나선다고 중국 외교부가 21일 공식 확인했음. 마자오쉬(馬朝旭)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원자바오 총리가 이명박 대통령,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총리와 함께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정상회담에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음.
- 29일과 30일에 열리는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천안함 침몰사건을 비롯해 북핵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임. 원자바오 총리는 이어 31일에는 도쿄를 방문, 하토야마 총리와 회담하고 6월 1일에는 아키히토(明仁) 일왕 내외도 예방할 예정임.

● 유엔사, 특별조사팀 구성.. ‘공동조사’ 검토(5/21)

-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수석대표 윤영범)가 천안함 침몰사태 규명을 위한 ‘특별조사팀’(SIT)을 구성,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예정임.
- 21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유엔사 군정위는 전날 민·군 합동조사단이 천안함 침몰 원인을 ‘북한군의 어뢰공격’으로 규명함에 따라 이를 토대로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음. 유엔사는 SIT를 구성해 22일부터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갈 계획임.
- 유엔사도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합조단 조사가 완료됨에 따라 유엔사는 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정전협정 위반사항의 범위를 판단하기 위해 중립국감독위원회와 유엔사의 위원들로 구성된 특별조사단을 소집한다”고 밝혔음.
- 특별조사단은 유엔사 소속 프랑스, 뉴질랜드, 덴마크, 영국, 호주, 캐나다, 한국, 터키, 미국 요원들과 중립국감독위 소속 스웨덴과 스위스의 요원들로 구성됐음. 군정위는 조사 결과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으로 판단하면 북측에 ‘북-유엔사 군사회담’을 제의해 조사자료를 전달하는 한편 정전협정 위반에 대해 강력히 항의할 예정임. 또 유엔군사령관 명의로 유엔에도 조사결과를 보낼 계획임.
-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군정위에서 합조단의 조사 결과를 확인하고 검증한 뒤 북한에 강력히 항의하고 공동 조사를 제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음. 그는 “북한이 공동 조사를 정치적 선전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고 전문가들을 보내 진지하게 조사에 응한다면 공동 조사를 수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앞서 북한은 천안함 침몰사건 조사결과가 발표된 지난 20일 우리 정부에 전화통지문을 보내 금주 말에 ‘국방위원회 검열단’을 보내겠다고 통보했음. 하지만 군 당국은 북한의 검열단 파견 제의는 정전협정 채널을 통해 풀어야한다는 입장임.
- 박정미 민군 합동조사단 공동단장도 전날 조사결과 발표 자리에서 “우리나라는 아직 정전상태임. 정전 관리를 위해 유엔사 정전위원회



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북측이 어떻게 연루됐는지 정전위에서 판단하고, 이를 북측에 통보하고 조치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 1999년과 2002년 서해에서 남북 해군 간 각각 발생한 제1·2연평해전 이후에도 유엔사와 북한군 간의 장성급회담이 개최돼 북측의 정전협정 위반을 강력히 항의한 바 있음. 군정위는 수석대표를 비롯해 한국, 미국, 영국 대표 1명씩, 6.25전쟁 15개 참전국이 6개월씩 맡는 순회대표 1명 등 모두 5명으로 구성돼 있음.
- 1953년 7월27일 국제연합군 총사령관과 북한군 최고사령관·중공인민지원군사령원 사이에 체결된 정전협정은 무력도발을 금지하고 있음.

● <긴급진단:천안함> “안보리 의장성명 가능성 높아”(5/21)

- 스콧 스나이더 미국 아시아재단 한미정책연구센터 소장은 20일 천안함 사건을 둘러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대응수위와 관련, “북한을 비난하는 또 다른 결의안 보다는 안보리 의장 성명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전망했음.
- 스나이더 소장은 이날 미외교협회(CFR) 홈페이지에 올린 논평에서 “중국이 이 문제를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진단했음. 스나이더 소장은 안보리에서 천안함 논의가 진행되면 중국은 북한의 ‘전면전 위협’을 이유로 내세워 대북결의를 채택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논리를 동원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음.
- 그는 “북한은 지난 2009년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안보리의 의장 성명이 채택된 것을 여전히 아파하고 있다”며 “중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즉각적인 유엔의 비난이 북한의 제2차 핵실험을 포함한 추가적인 긴장고조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음. 그는 “그러나 한국과 미국은 중국에 대해 ‘북한의 행동이 중국의 이해관계에도 해가 된다’는 점을 알려야만 한다”면서 “북한이 처벌을 받지 않고 저항도 도발을 계속할 수 있도록 ‘백지수표’를 주겠다는 중국 측 입장은 안보리 논의과정에서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음.
- 스나이더 소장은 한국 정부의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가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의 한·중·일 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이뤄진 것은 “천안함을 클린턴 장관 순방의 주요의제로 만들려는 분명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특히 클린턴 장관의 중국 방문을 겨냥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음.

● <클린턴 천안함 파장 속 아시아 순방길>(5/21)

-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이 20일 일본과 중국, 한국을 차례로 도는 일주일간의 아시아 3개국 순방길에 올랐음. 버락 오바마 행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2월 ‘퍼스트 레이디’ 출신의 첫 외교수장으로 한·중·일 3개국과 오바마 대통령이 유년시절을 보냈던 인도네시아



- 를 엮어서 방문한 이후 1년 3개월만의 출장임.
- 클린턴 장관은 당시 대학생들과의 타운홀 미팅, TV쇼 출연 등을 통해 해당 지역 국민과의 '소통 외교'에 공을 들였으나, 이번 출장은 그런 '여유'를 부릴 만큼 한가롭지 못함. 당장 천안함 사건이 북한에 의해 자행된 도발행위라는 사실이 한 달여간의 객관적이고도 과학적인 조사를 통해 드러났기 때문임. 여기에다 북한이 한국 정부의 발표를 '조작'으로 몰아세우며 대북제재 조치 등이 가해질 경우, 전면전도 불사하겠다고 협박하고 나선 마당이어서 순방지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할 수밖에 없게 됐음.
 -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19일 클린턴 장관의 아시아 순방의 의미를 사전 브리핑하면서 "장관의 아시아 방문 목적과 이유 중 하나는 (천안함 사고조사 발표 이후) 다음 단계에 관해 한국, 중국, 일본과 최상의 협의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 한반도 안보환경을 둘러싼 논의가 순방의 주요 의제가 될 것임을 분명히 했음.
 - 캠벨 차관보는 또 오는 24일부터 이틀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미·중 경제전략 대화'에서 클린턴 장관과 다이빙귀 중국 국무위원이 만났을 때 천안함 조사결과에 대한 서로의 입장과 북한내부 상황에 대한 인식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음.
 - 즉 애초에 미·중 경제·전략대화는 G2로 자리매김한 두 나라의 경제문제, 이란의 핵개발 대응문제, 아프가니스탄 및 파키스탄 안정화 문제, 기후변화 및 에너지 대책과 관련된 공조방안 등에 초점을 맞췄지만, 강력한 외생변수인 북한 도발문제를 뒷전으로 미뤄둘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것임. 클린턴 장관이 이번 경제·전략대화에서 북한의 도발에 관대한 입장을 보여 온 중국 지도부를 어느 정도 설득하느냐가 이후 천안함 도발사건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 및 장기적 관점에서 6자회담 재개 문제 등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점에서 미·중 협의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음.
 - 미국 행정부는 올해 들어 미국제 무기의 대만수출, 오바마 대통령과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의 면담, 위안화 절상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이 빚어진 점을 의식, 이번 경제·전략대화에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을 비롯해 200여명의 정부 대표단을 파견한 상태임. 일본이 이번 클린턴 장관의 일정에 포함된 것은 다분히 '재팬 패싱'을 우려하는 일본을 의식한 측면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 물론 오키나와의 주일미군 후텐마 공군 비행장 이전문제를 놓고 미국과 일본이 그동안 갈등을 겪어왔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원만한 타협점을 찾으려는 목적도 클린턴 장관의 방일 목적에 들어있는 것으로 보임. 이번 순방에서 천안함 사건 관련한 미국의 대응방향이 뚜렷하게 제시되는 시점은 26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외무장관 회담이 될 전망이다.
 - 클린턴 장관은 일본과 중국을 거치면서 조율된 천안함 대응방안을 한국 정부와 최종 협의를 통해 대내외적으로 천명하는 외교적 수순



을 밝게 될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임. 특히 클린턴 장관은 천안함 사건을 한미동맹 차원에서 대처해야 할 사안으로 인식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한미동맹 강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천명할 것으로 예상됨.

● 英, 日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지지(5/21)

- 연립정부는 일본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을 계속 지지한다고 20일 밝혔음. 연정은 유엔의 기구 개편을 지지할 것이며 여기에는 일본, 인도, 독일, 브라질, 아프리카 등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문제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은 안보리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수년째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음.

● 조엘 위트 “대북 대화노력 지속해야” <NYT> (5/19)

- 과거 미국 국무부 북한담당관으로 일하며 지난 1994년 북미 제네바 협상의 실무주역으로 활동했던 조엘 위트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 연구원은 18일 “일관된 외교적 노력만이 북한의 위협을 줄이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 위트 연구원은 이날 뉴욕타임스(NYT) 기고문을 통해 “지난 16년간 무려 18차례나 북한을 방문하면서 겪은 경험상 북한을 고립시키면 반발만 키우게 된다”면서 이 같이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정치적 불안정, 식량부족, 경제침체 등을 겪을수록 미국의 요구를 쉽게 받아들일 것이라는 가정 하에 미국이 이른바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라는 기다림의 게임을 고수하고 있지만 북한의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 즉, 김정일 위원장은 여전히 권력을 장악하고 있고 식량난이 지속되고 있지만 지난 2년간 수확은 비교적 양호했으며, 산업생산도 증가세를 기록하고 중국의 지원 덕분에 무역감소세도 미미한 상황에서 핵안보만이 미국의 위협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는 것임.
- 위트 연구원은 특히 천안함 사태는 한반도의 안정을 북한의 선의에 맡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미국의 ‘전략적 인내’의 위험성을 더 명확하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정일 위원장이 공개적으로 대화 의사를 밝혔던 만큼 미국은 기회의 창이 될 수도 있는 것을 닫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 뒤 “천안함 사태는 오바마 정부가 대북 접근법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으며, 긴장을 크게 고조시킬 수 있는 조치들을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 그는 “예컨대 천안함 사건에 대한 사과와 같은 새로운 회담 전제조건을 내거는 대신 나쁜 행동에 대한 보상이나 회담을 위한 회담이 아닌 우리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협상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실용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위트 연구원은 북미 제네바협상 당시를 소회하며 “당시 정보기관들



은 북한이 2000년까지 100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물질을 확보할 것이라고 했으나 협상이 이를 막았다”면서 “성과가 미미하다고 해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천안함 침몰 이후에도 미국과 한국은 대화만이 북한의 행동에 고삐를 질 수 있는 현실적인 유일 대안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국제관계연구센터 제공